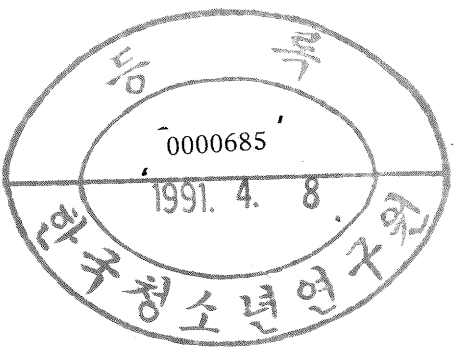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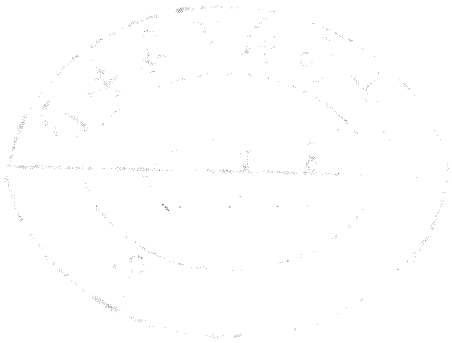
研究報告 90-01-05

非進學·未就業 青少年을 爲한 綜合對策 硏究



한국청소년연구원



서 문

오늘 우리는 상급학교에 진학도 하지 못하고 적성에 맞는 일터에 진로 또한 못찾은 채, 고민하고 있는 50여만의 청소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 자녀들을 무슨 방법으로 위로하고 지도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잠을 못 이루며 번민하고 있는 100만의 어버이들의 아픈 가슴을 헤아려 봅니다.

1989년 현재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수가 43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나 취업대책은 미흡하고 취약합니다. 최근 과열입시로 인한 70% 이상의 대입지원 청소년이 탈락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교 졸업생이 50여만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지게 되었고, 입시철을 맞아 대학입시 제도개선이나 제도권내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 논의는 피상적이나마 활발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나 정책적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행정의 사각지대속에서 소외와 좌절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자칫 사회구조적인 상황속에서 반감과 적개심을 유발해,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들 집단은 복지의식의 향상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권리 및 생존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점차 다양하게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을 교육·훈련시켜 취업 시키는 일은 사회적 통합성의 구축과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득 지난해 입시철에 일어난 몇가지 들추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입시 홍역의 계절인 지난해 11월 초순, 서울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대학입시 열병으로 정신을 잃은 채 11층에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난 꽃다운 김모군과 같은 날 같은 단지 4층에서 김군의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고 투신자살한 지모양을 비롯하여, 1989년 11월 초순 열흘동안에 10

사람의 청소년이 이런 끔찍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입시철이 올 때마다 평균 사흘에 한번씩 청소년의 자살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대로 두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리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저는 대학에 꼭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갈만한 성적도 물론 못되지만 대학만이 행복의 동산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적성에 맞는 그러한 일을 노래하며 즐겁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 대학이 인생에 유일한 진로는 결코 아니지. 딴 일도 있어. 그길이 결코 대학진로의 길보다 못지 않아. 네 적성과 타고난 재능을 살리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우리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합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그 새날이, 그 새벽이 밝아올 것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쓰라리고 괴롭고 땀흘리는 밤과 낮이 가고 또 달과 해가 많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잃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입시라는 무거운 멍에에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꿈을 잊은 나라는 망합니다. 청소년에게 실현성이 가능한 환상(Vision)을 길러주는 사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 부모, 스승, 정부나 사회 언론을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의 의식에 일대전환, 가치관의 대혁명이 먼저 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꾸준하고 줄기차게 모색을 해 나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연구보고서를 내 놓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를 중심 과제로 삼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육 및 사회정책적 전환을 유도하고, 국민의식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진학 과열의 소용돌이가 친 1990년 1월 말부터 2월 말사이에 체육부의 각별한 배려와 후원으로 수행한 집중연구의 한 작은 열매입니다. 그간 이 연구보고서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기십명의 학계 석학들께

서 여관에 모여서, 밤이 깊은 줄 모르고 토론과 집필에 열을 쏟아 주셨고, 특히 경기대학교 최충옥교수님께서 총괄 책임을 지시고 이 연구보고서 완성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고정리등 궂은 일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 모경환 선생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 12월

한 국 청 소 년 연 구 원

원 장 이 윤 구

目　　次

서　문

Ⅰ. 硏究의 槪要 및 經過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3
2. 硏究의 主要內容 …… 4
3. 硏究의 方法 및 節次 …… 5
4. 旣存硏究 및 對策의 回顧와 反省 …… 7

Ⅱ. 非進學·未就業 靑少年 集團의 實態 및 問題点

1. 非進學·未就業 靑少年의 範疇 …… 11
2. 非進學·未就業 靑少年의 量的 推算과 再修生의 累積 …… 12
3. 非進學·未就業 靑少年非行의 動向과 問題點 …… 18
4. 非進學·未就業 靑少年의 心理的 特性 및 精神醫學的 問題點 …… 20

Ⅲ. 非進學·未就業 靑少年 問題의 發生原因 分析

1. 設問紙 및 意見書 分析 …… 34
2. 分析模型의 設定 …… 36
3. 細部 關聯要因 分析 內容 …… 37
   1) 設問紙 分析結果 …… 37
   2) 意見書 結果 및 資料要約 …… 42

Ⅳ. 非進學·未就業 靑少年 問題解決을 爲한 對策方向과 具體的 方案

1. 敎育對策 …… 47
   1) 高等敎育 門戶開放과 擴大 方案 …… 47
   2) 中等敎育課程의 正常化 方案 …… 51
2. 就業및 社會對策 …… 55
   1) 就業機會 및 訓鍊機會 擴大 對策 …… 55
   2) 社會福祉로서의 敎育社會 建設의 方案 …… 76

3) 青少年文化空間의 確保 綜合對策 方案 ····· 81
3. 學父母 意識改革 對策 ····· 83
1) 學父母의 責任과 役割 ····· 83
2) 言論媒體 活用方案 ····· 87
3) 意識과 制度改革의 相互作用 ····· 89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 94
2. 結論 및 題言 ····· 102

*參考文獻

Ⅰ. 硏究의 槪要 및 經過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해방이후 45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등교육의 의무화,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고등교육은 대중화 단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발전과 교육기회확대의 이면에는 아직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며, 더우기 원하면서도 직업전선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수가 54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4세 부터 22세까지의 비진학 청소년의 수는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과열입시로 인하여 70%이상의 대입지원 청소년이 탈락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고교졸업생이 5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청소년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 자칫 비행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집단이 적체됨에 따라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어 정녕 국가적 낭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의 잠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 단체에서도 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에 주목하고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는 일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관심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지(衆知)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재수생 문제, 청소년 문제들에 관심을 가

지고 이를 해결·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와 상당한 효과를 거둔 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비진학·미취업자들에 관한 교육대책, 취업 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의식)대책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교육내적 문제에 촛점을 두어 왔으며, 사회적 대책 분야에 소홀해 온 것 같다. 최근 몇가지 연구들에서는 사회대책 분야에 논의는 있어 왔으나, 사회 구조적 요인이나 제도개선 대책에 중심이 두어지고, 보다 근본적이라 볼 수 있는 국민의식적 요인이나 학부모 대책에 소홀해 온 것같다.

그러므로 본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를 중심과제로 삼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들을 탐색하여 교육 및 사회정책적 전환을 유도하고, 과열입시에 따른 청소년 문제들을 부각시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며, 나아가 비진학청소년의 인간권리 및 청소년 건전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 감소등, 국민의식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근본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향 탐색과 실천가능한 몇가지 중점적 대책방안을 교육대책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대책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研究의 主要內容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여기서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 집단의 규모와 재수생 집단의 누적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관계를 파악하여 그 동향과 문제점의 심각성을 추출한다. 특히 비진학·미취업 청소

년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의학상의 문제점에서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의 심각성이 지적된다.

둘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의 발생원인을 진단한다. 여기서는 이들 집단의 생성 및 문제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원인들을 기존연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주요요인들을 교육내적 측면, 사회구조적 측면, 그리고 국민의식적 측면에서 추출하고 분석·진단한다.

셋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회변동의 추세와 대상집단을 전망하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지향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을 마[illegible]다. 이 대책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의 과제로서 교육, 취업 및 사회적, 그리고 학부모 의식 측면에서 각 영역별 2~3가지의 주요대책을 선정하여 각 대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3. 硏究의 方法 및 節次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는 그동안 사회문제로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도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교졸업생이 50만명에 이르게 되자, 盧대통령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교졸업생들에게 진로를 열어 줄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전반에 걸친 기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소년문제를 담당하는 체육부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 연구를 한국청소년연구원에 위촉하였으며,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였다.

1990. 1. 30	연구추진위 구성(원내 2명 원외 2명)
1990. 2. 2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1990. 2. 7	전문가연구협의회 개최(전문가 및 학자, 학부모, 정책담당자 등 30여명)
1990. 2. 14	연구실무위원회 개최
1990. 2. 21	집필자 조정회의 개최
1990. 2. 26	연구실무위 심의회 개최
1990. 2. 28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 시안 마련

1990. 3월중　언론기관을 통하여 토론회 및 좌담회등 여론수렴 단계를 거쳐 3월중 최종보고서 작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추진위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에 관련된 각종 문헌,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둘째,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 전문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도 참가하여 연구의 계획과 정책의 방향 설정 및 대안 제시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러차례의 검토를 받았다.

세째, 전문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서 및 의견서를 작성토록하고 이를 수집 분석하여 주요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 확정하였다.

네째, 집필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대책을 수렴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대책, 취업 및 사회대책, 학부모대책 분야로 나누어 각 조정책임자를 두어, 각 영역별로 협의조정하였다.

본 대책연구에 있어 경기대 최충옥교수의 총괄 책임집필하에 영역별 조정책임자 및 집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책	조정책임자:문용린(서울대)
1) 고등교육문호개방과 확대방안	윤종건(외　대)
2) 중등교육과정의 정상화 방안	문용린(서울대)
2. 취업 및 사회대책	조정책임자:이영수(경기대)
1) 취업기회로서의 훈련기회확대 방안	장석민(한국교육개발원)
2) 사회복지로서의 교육사회건설 방안	이영수(경기대)
3) 청소년문화공간의 확보 방안	한준상(연세대)
3. 학부모의 의식개혁 대책	조정책임자:김신일(서울대)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	김신일(서울대)
2) 언론매체 활용방안	최창섭(서강대)
3) 의식과 제도개혁의 상호작용	김충열(고려대)

이 연구는 정책연구의 한 형태로서 1990년 2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존연구 및 대책의 검토(서정화, 기존연구 및 대책의 회고와 반성 참조)를 바탕으로,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원인분석에 치중하기 보다는 거시적이

고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책방향 탐색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초적이고 이론적 논의나 논거의 제시는 배제되었다. 향후 보다 근원적인 원인연구나 이론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의 실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 정책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旣存硏究 및 對策의 回顧와 反省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전체 청소년 문제의 진단과 대책연구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나온 '청소년문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1983)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 세부추진 계획(1985, 미출판물), 이재창외 '청소년문제 종합진단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81), 정원식외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한국여성개발원의 '한국 소년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1985),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청소년백서'(1985) 등의 연구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집단의 현황 및 실태를 기술,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밝힌 다음 앞으로의 개선 방향 및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이며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제시가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 그 대책의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흡 및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부족, 그리고 담당 부처의 행정력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유관부서에서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내무부에서는 1985년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보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무부 및 각 시·도에 청소년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의 인적사항, 가정환경, 생활실태 등을 읍·면·동별로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지방 청소년 대책 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적인 능력과 희망 등에 따라 취업을 알선하거나 지역인사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이웃돕기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보호대책을 펴기도 하였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각종 직업 훈련시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많이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989년에는 71억원을 투자하여 4,300여명의

비진학 청소년에게 무상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노동부 산하 한국직업관리공단 소속 32개 훈련원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1~3년 간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청소년과 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무상으로 기술계 사설 강습소에 다니도록 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교부에서도 1989년 한 해 동안 19개 공업고등학교와 공업전문대학, 농어촌의 고등학교 8개교에 공업계 병설 학교를 설치 운영하였고, 농공단지나 공업단지 등에 인접한 공업고교나 공업전문대학에 단기 직업훈련과정을 부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공업계 각종학교 및 공업기술학교 등에 실습비를 지원하여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들 직업훈련 과정과 자격증 취득을 연결시켜 비진학자들의 취업을 촉진시켜나가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군지원병 제도를 홍보하여 이들이 군복무와 동시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왔다. (문교부, 1989)

이상과 같이 정부 유관부처에서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거둔 면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부면에서는 극히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시행에 머무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왔다.

다행히 근자에 홍익대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에 촛점을 두고, 이에 대한 기본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몇가지 대책을 마련, 제시한 바 있다. 홍익대 교육연구소에서는 1986년 2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여러차례에 걸쳐 관계 전문가 및 관계관 회의 등을 열어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되어야할 정책과제들을 마련,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정책의 방향으로서는 (1) 교육기회의 확대 (2)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3) 평생교육의 기회 확충 (4) 취업성향성 증진 (5) 취업기회 확대 (6) 사회적 보호·선도 기능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방향 아래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는 교육대책, 취업대책, 그리고 사회대책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여기서 교육대책은 (1) 직업교육의 효율화 (2) 진로지도의 강화 (3)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 범위 확대 (4) 중등 교육제도의 운영 보완 (5) 근로청소년을 위한 계속기회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취

업대책으로서는 (1) 취업지향 여건 조성 (2) 적절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훈련 기회 확대 (4)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그리고 사회대책으로서는 (1)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실태 파악 체계화 (2) 사회교육기관 설치·운영확대 (3) 선도활동 강화 (4) 지원병 제도의 확충 및 취업알선 (5) 농어촌·도서지역 청소년 지원 대책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서정화외, 1986).

이어서 198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국무총리실의 위촉을 받아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밝히고 그들의 진로유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그들의 의식, 경험, 청소년시설 이용 실태, 요구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가정, 학교, 사회, 취업, 청소년 여가시설 등의 측면에서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1) 진로지도 센타 설치 및 전담요원 배치 (2) 학생의 처벌 및 징계제도개선 (3) 중퇴 및 비진학자의 추적지도체제 확립 (4) 학교의 진로교육 및 인간교육 강화 (5)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실시 (6)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과정 개선 (7) 비행의 예방과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8) 복지시설 및 복지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수행 결과가 유관 부처에 보고되고 사회에 발표되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수용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 실천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원인으로서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미흡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다.

둘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과 관련된 업무는 정책의 대상이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관련부처의 업무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어디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말하자면, 이들을 위한 대책의 추진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원칙적인 것들이 많고 실현가능성의 한계가 없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성질의 것들이 많았다.

넷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였다.

사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행로는 어떠한가 등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 분석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나 기관, 연구단체 등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언론, 학부모, 기업체, 지역사회 등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중지를 모아야할 필요가 절실하다.

Ⅱ. 非進學·未就業 青少年集團의 實態 및 問題点

1. 非進學·未就業 青少年集團의 範疇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세계에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때로는 이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진학에 실패하여 일정하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뚜렷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 즉 재수생이나 무직상태에서 놀고 있다고 지칭되는 청소년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집단, 즉 학생신분의 청소년, 근로, 농어촌, 요보호 청소년 등과는 구별되지만, 하나의 집단범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일을 잃거나, 없는 청소년들은 각 유형 청소년 집단의 경계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은 각 청소년 집단의 경계지역에 산재해 있는 만큼 그 성격도 일정한 특성을 지니기 보다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이들 집단은 일이 없는 기간이나 실직 상태면에서 볼 때, 장기간 그 기간이 누적되어온 청소년에서부터 반복실업을 거듭하는 청소년까지 집단 내부가 구조적으로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사회학적 특성상 흔히 '주변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일이 없는 청소년 집단은 '주변인 중의 주변인'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존재이다. 흔히 사회에서 일이 없는 이들 청소년집단을 '비행화의 우려 집단' 혹은 '문제집단' 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다양하고 다층적인 이들 집단의 어느 일

면의 경향성만을 지칭할 뿐이다.

여하튼 일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사회적·복지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이들이 일을 잃게된 경로 즉 진로경로에 대한 대책차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체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정 연령이상 청소년들의 가능한 진로는 크게 일정한 직업을 갖게되는 취업행로와 상급학교로 진출하여 계속 학교교육체계에 머무는 진학의 경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을 잃은 청소년의 대부분은 구직의사가 있으면서도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진학할 의사가 있지만 상급학교의 선발전에서 탈락한 경우이다. 즉 일을 잃은 청소년은 비진학·미취업의 진로유형에 따른 주변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비진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참조 : 김수일·1983, 김지자·1985) 이 연구의 취지상 진로경로 중심으로 정의하여, 준학교 또는 정시제 여하에 상관없이 기간학제에 해당되는 어떤 학교의 형태에도 진학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한다. 이때 비진학 청소년에는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진학기대를 가지고 시도하는 재수생군과 취업자 및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자 모두를 포함한다(참조 : 서정화외, 1986;5).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각급학교 졸업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으로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일이 없는 청소년 집단이지만 일이 없는 청소년의 전체 양적 규모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이 없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미로 진학과 취업이외의 다른 많은 경로로 유입될 수 있고, 비진학·미취업은 진로경로 중심의미를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일이 없는 상태 중심보다는 교육·사회적 대책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과도한 상급학교진학 경향에 따라 야기되는 비진학의 진로경로 중심으로 이들을 인식하고자 한다.

2. 非進學·未就業 靑少年의 量的 推算과 再修生의 累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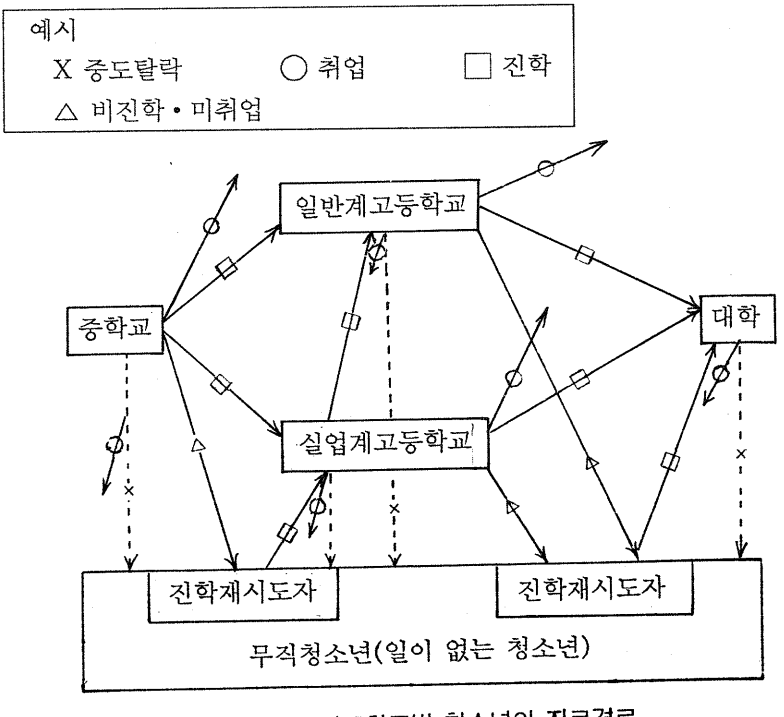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일이 없는 청소년 집단의 양적 규모를 측정

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이들 청소년 집단 범주 설정의 혼란과 생성 경로별 또는 상태별 통계상의 추론의 난해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조사와 연구들은 각각 적게는 만4천여명에서 많게는 50여만명 이상으로 집계 또는 추정하고 있다(참조 : 한국청소년연구원 • 1989, 서정화외 • 1986, 체육부 • 1989, 장석민외 • 1988).

따라서 여기서 이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의 마련에 관심을 갖는 연구의 목적상, 현재 일이 없는 상태의 청소년들의 전체 양적 규모의 추산 보다는 기간학제로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하여 진로경로별의 양적추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첫째, 전체의 양적규모의 추산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기여할수 있지만, 이들 청소년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유효한 정보로는 작용하지는 않으며, 둘째, 진로 경로별 추정은 전체적인 양의 추산이 불가능한 대신 진로경로마다의 문제집단과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인식계기와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Ⅱ-1〉 각급학교별 청소년의 진로경로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경로를 각급학교 중심으로 볼 때, 첫째, 무직상태로의 가능 경로는 각급학교의 중퇴집단이다(중·고중퇴자 합계는 약 74,000여명)

〈표Ⅱ－1〉 각급학교별 중퇴자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중퇴자	
		일 반 계	실 업 계
1985	29,052(1.0)	23,913(1.9)	33,973(3.8)
1987	28,322(1.1)	27,022(1.9)	29,303(3.5)
1989	28,025(1.2)	29,346(2.0)	27,007(3.2)

*괄호안은 전체학생수의 백분율

〈자료〉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7, 1989

둘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을 들 수 있다.(중졸 비진학자 약 46,000명)

〈표 Ⅱ－2〉 중학교 졸업자 진로상황

	졸업자	진 학 희 망 자			진 학 자		
		일반계	실업계	계	일반계	실업계	계
1985	855,627 (100)	505,308	303,992	809,300 (94.6)	481,866	294,578	776,444 (90.7)
1987	932,552 (100)	558,117	332,969	891,086 (95.6)	537,743	318,926	856,669 (91.3)
1989	863,211 (100)	542,688	298,491	841,172 (97.4)	525,680	291,111	816,791 (94.6)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7, 1989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중졸자의 97.4%가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체 졸업자 중 94.6%가 실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런데 진학희망자중 진학자는 일반계가 96.9%, 실업계가 97.5%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진학희망자 중 비진학자는 진학을 재시도하거나 무직상태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들은 양적 규모면에서는 많지않다고 할 수 있으나 중학교의 교육목적상 이들은 일정한 기술을 아직 취득하기 이전단계이므로 취업상태에서도 반복실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비행청소년의 저연령화, 폭력화 등과 관련하여, 언론계(특히 라디오)등 사회에서 크게 문제화 집단으로 우려하고 있다.(부록 설문지 분석 참조)

세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진로경로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Ⅱ-3〉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상황

	졸업자	진학희망자	진학자			취업
			계*	대학**	전문대학	
1985	365,819 (100)	302,977 (82.8)	196,827 (53.8)	137,239 (37.5)	52,875 (14.5)	27,190 (7.4)
1987	412,146 (100)	347,202 (84.2)	220,338 (53.5)	149,022 (36.2)	64,180 (15.6)	33,738 (8.2)
1989	450,118 (100)	381,304 (84.7)	225,048 (49.9)	150,121 (33.4)	68,408 (15.2)	45,588 (10.1)

*진학자 합계는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의 입학자를 모두 합한 수치임.

**대학진학자에는 대학과 교육대학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7, 1989

〈표Ⅱ-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상황

	졸업자	진학희망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1985	276,535 (100)	83,033 (30.0)	36,910 (13.3)	143,214 (51.8)	44,162 (16.0)
1987	271,274 (100)	70,556 (25.9)	30,213 (11.1)	171,689 (63.3)	32,304 (11.9)
1989	256,771 (100)	56,557 (21.7)	24,728 (9.5)	193,612 (74.5)	16,455 (6.3)

우선 일반계 고졸자의 경우를 보면 점차 고등교육에로의 진학희망률은 증가한 반면에 진학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수용 증가율이 진학희망의 증가분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진학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1989년 현재 전체 졸업자 33.4%만이 진학하고 있으며, 진학희망자의 39.4%를 수용하고 있다. 한편 일반계 고졸자의 취업률은 점차 증가해 10.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먼저 1989년 현재 진학희망자 중 비진학자는 156,256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개가 다음 년도에 진학을 재희망하는 재수집단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졸업자 중 비진학 희망자로서 미취업자는 23,226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에 진학한 연후에 재차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을 재시도하는 집단군을 고려한다면 진학재시도 집단은 추정수치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업계 고졸자의 경우를 보면 진학희망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1989년 현재 전체 졸업자의 21.7%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진학자는 전체의 9.5%에 불과하며, 진학희망자 중의 진학비율은 43.7% 정도이다. 이는 일반계 고졸자의 50.5% 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 진학희망자 중 비진학자는 31,827명이며, 이들은 진학재시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무직의 경우는 급격히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1989년 현재 16,455명 정도이다.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상황을 통괄하여 본다면 비진학자의 경우 일반계가 156,256명, 실업계가 31,829명으로 총188,085명으로, 추정 집계할 수 있다. 또한 군입대등을 제외한 순수 미취업자는 일반계 고졸자가 23,226명이며 실업계 고졸자는 16,455명에 이르러 총39,681명이다. 이렇게 볼 때 비진학자중 취업경우 등을 고려치 않는다면 1989년 현재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대략 227,766명 정도로 추정 집계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Ⅱ-5〉 대입학력고사 실시 상황

	고졸자수	응시자수			대학정원
		계	당해졸업	재수자	
1985	642,354	725,861 (100)	459,323 (63.3)	266,538 (36.7)	203,502
1987	683,420	732,931 (100)	501,115 (66.2)	230,816 (33.8)	—
1989	709,889	1,103,647 (100)	—	—	310,22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1989

〈표Ⅱ-6〉 대학지원 입학현황

	지 원 자			입 학 자		
	계	당해졸업자	재 수 자	계	당해졸업자	재 수 자
1985	511,810	300,120	200,247	201,934	125,116	73,143
1987	513,167	332,415	168,576	194,657	136,996	54,350
1989	817,109	490,859	298,361	191,817	129,054	59,66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1989

〈표Ⅱ-7〉 전문대학지원 입학상황

	지 원 자			입 학 자		
	계	당해졸업자	재 수 자	계	당해졸업자	재 수 자
1985	178,125	112,573	62,476	108,483	69,053	37,859
1987	228,222	148,377	75,441	110,234	73,790	34,829
1989	274,338	164,098	103,568	114,615	69,738	42,704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감. 1987, 1989

다른 한편 1989년 현재 대입학력고사 실시상황을 보면 대학정원 30여만명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무려 11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표Ⅱ-6〉과 〈표Ⅱ-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졸업자의 지원자중 입학비율이 재수자의 지원자 중 입학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9년도 재수자중 입학율이 대학의 경우 20.0%, 전문대학이 41.2%로 나타나, 진학재시도자중 평균 입학율을 30%로 추정한다면, 1989년도 재수시도자를 30만으로 추산할 때, 진학재시도자 중 비진학자는 대략 21만에 이른다. 따라서 1989년도에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양적규모는 당해 졸업자 중 약 22만명과 진학재시도 실패자 21만명을 합해 총 43만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외에 중·고 중퇴자(약 74,000명) 및 중졸 비진학자(약 46,000명)등 약 11만명을 고려하고 취업자수를 뺀다고 하더라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규모는 약 50여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전체 양적규모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각급학교별 진로 경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계 고졸자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과 실업계 고졸자의 그 수준은 이수한 교육내용의 성격상 문제의 질적 정도가 매우 이질적임에 틀림없다.

3. 非進學·未就業 靑少年 非行의 動向과 問題点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이들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이 어느 청소년 집단보다 비행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학생들과 같이 학업에 열중하지도 못하고, 근로 청소년들과 같이 직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들은,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채 뚜렷한 목적의식없이 부정적인 자아의식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낮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서정화, 1986) 불량집단과 어울리다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범죄자의 직업별 상황을 보면 잘 이해될 수 있다. 〈표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자중 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를 보이고 있으며, '88년 현재 30.3%를 보이고 있다.

〈표Ⅱ-8〉 청소년 범죄의 직업별 상황 (단위 : 명)

연 도	계	무 직	학 생	농 업	직 공	노 동	종업원	넝마주이 구두닦이	기 타
1980	87,867 (100)	32,136 (36.6)	22,271 (25.3)	3,644 (4.1)	5,999 (6.8)	2,823 (3.2)	6,504 (7.4)	373 (0.4)	14,117 (16.2)
1984	104,450 (100)	35,493 (34.0)	33,144 (31.7)	2,411 (2.3)	6,497 (6.2)	2,981 (2.9)	8,301 (7.9)	181 (0.2)	15,442 (14.8)
1988	103,736 (100)	31,394 (30.3)	30,628 (29.5)	1,249 (1.2)	5,838 (5.6)	2,512 (2.4)	9,378 (9.1)	87 (0.1)	22,607 (21.8)

자료 : 대검찰청

주 : 군인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제외

여기서 무직청소년 집단의 전체크기를 고려한다면, 학생등 다른 집단에 비해 청소년 범죄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자신들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적 빈곤상태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장석민외, 1988 ; 72~90)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신감과 신뢰감이 낮으며 가정의 안락정도 • 부모의 애정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낳게 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격차의 심화는 하류계층 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이들은 자포자기하여 사회의 생산적인 성원이 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유휴노동력으로, 또 비행유발의 잠재요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Ⅱ-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의 생활정도별 상황을 살펴보면 하류층 가정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 범죄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90.1%, '84년 88.5%, '88년 87.1%로써,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Ⅱ-9〉 청소년 범죄의 생활정도별 상황 (단위 : 명)

연 도	계	하 류	중 류	상 류
1980	87,962 (100)	79,232 (90.1)	8,406 (9.6)	324 (0.3)
1984	104,578 (100)	92,565 (88.5)	11,483 (11.0)	530 (0.5)
1988	104,052 (100)	90,607 (87.1)	12,883 (12.4)	562 (0.5)

그리고 교육개발원의 조사연구(1988 ; 103)에 따르면 중퇴 • 비진학의 가장 많은 사유로서 '공부가 싫어서'(37.5%), 다음으로 '성적불량'(35.6%)을 들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연구원의 보고서(1989 ; 59)에 따르면 무직 • 미진학 청소년으로 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상급학교 진학 실패임(72.1%)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장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낼 뿐 아니라 보다 광범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입시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학교 및 입시에서의 과열경쟁 및 학습능력의 결손과 실패, 상급학교 진학의 실패등이 무직 • 방황하는 청소년 집단 형성의 주요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교육정도별 상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매년 증가하며 '88년에는 44.3%로 증가하였다.

〈표Ⅱ－10〉 청소년 범죄의 교육정도별 상황 (단위 : 명)

연 도	계	불 취 학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기 타
1984	104,578 (100)	794 (0.8)	13,314 (12.7)	34,623 (33.1)	42,609 (40.8)	3,690 (3.5)	9,548 (9.1)
1986	106,355 (100)	556 (0.5)	8,347 (7.8)	33,523 (31.5)	44,066 (41.4)	4,491 (4.2)	15,372 (14.5)
1988	104,052 (100)	468 (0.4)	5,986 (5.8)	30,321 (29.1)	46,140 (44.3)	4,141 (4.1)	16,996 (16.3)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실패와 상급학교 진학의 좌절을 경험하고, 생활정도는 하류층이며 무직·방황하는 이들 청소년들은 좌절감·열등감, 부모의 기대를 성취하지 못한 죄책감, 교우·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고립화에서 오는 불안감, 유혹과 갈등, 사회의 냉대에 대한 반항 혹은 반감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역할갈등, 자아침체와 혼미, 아노미 현상 등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비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4. 非進學 未就業 靑少年의 心理的 特性 및 精神醫學的 問題點

〈1〉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다시 입시 준비를 해야하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년 수십만명의 청소년 집단들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를 위해 몇해씩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금전을 소모해 가면서 상급 학교 진학만을 바라며 낙방의 충격과 좌절감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분위기 정화에 있어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우기 인생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고 정서적 격동이 심한 청소년기에 받은 입시 실패 충격은 심각한 심적 부담감을 주게되고 나아가서는 열등의식을 조장하여 건전한 인격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가정에서 냉대 받고 친구에게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인생의 낙오자로서 속칭 '재수병'이란 핸디캡 속에 젊음을 미처 펼쳐 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릴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재도전에 실패할 경우엔 계속되는 패배의식 속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장래 걱정으로 불안 초조해져서 이러한 시험불안이 그들의 인생행로에 끊임없이 쫓아 다니며 괴로움을 주기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하겠다. 그간 정부 당국의 끊임없는 입시 제도 변혁을 통해 입시병을 치유하려는 교육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입 탈락 재수생이나 비진학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사회 정신의학적 논의의 주제로 등장한 것은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고 진학 희망자가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 정신의학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이 왕성하고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어려움이 인생의 어느시기보다도 많은 정서적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받은 욕구 좌절은 다양한 정신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둘째, 매년 수험생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입학 정원은 큰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율이 높아짐에따라 입시 탈락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모든 관심이 입시 문제에 집중 되고 있다.

최근 진학사의 보고(1990)를 보면 1982년이 대입 학력 고사 지원자가 고3 학생 389,195명 재수생 202,531명(재수생 비율 34.2%)으로 모두 591,727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고3 597,456명 재수생 283,890명(재수생 비율 32.2%)으로 모두 889,147명이 지원함으로서 수험생이 최근 8년간 50.26%가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 입학 정원이 1982년 191,399명에서 1990년 199,750명으로 4.36% 증가한데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입시 탈락자를 보면 1982년에는 400,328명 이었으나 1990년엔 689,397명으로 72.2%가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자료는 입시 탈락 학생에 대한 범국민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입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입시위주 사회풍토로 인해 가족이나 수험생 모두 과잉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류 집착증이나 과잉 기대로 인해 수험생들이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다.

최근 문교부 발표를 보면 1977년에는 아들의 대학입학 희망율이 56.3%이고 딸은 33.6%이던 것이 1987년엔 아들 84.8%, 딸 70.4%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학으로 진학시키려는 기대 수준이 약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

진학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학교가 지식 전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위기 의식을 조장하기 쉽고, 학교에서 도덕·품성 교육이 도외시되고 정서적 발산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일으켜 정신장애를 야기하기 쉽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주 변화되는 입시제도로 인해 수험생들이 대응책을 찾지못해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원 학교 및 지원 학과 선정에 있어 혼선이 생겨 수험생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재수를 거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입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실시되어 중학교 입학시험이 없어졌고,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한 연합고사 제도가 생겨 고등학교 시험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과외 열풍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81년 7월 30일 교육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다. 대학별 본 고사가 폐지되고 예비 자격 고사가 학력고사로 변화되어 대학별 입시가 없어지고 졸업 정원제가 신설되어 정원의 130%를 선발하여 그중 학습이 부진한 경우에 유급 및 탈락시키는 제도적 변화가 단행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후 1982년에는 2개 대학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별로 전환되었으며, 1986년에는 학력고사 과목이 16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입시전 눈치 작전이 절정에 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교육 개혁이 다시 단행되었다. 졸업 정원제에서 입학 정원제로 환원시키고 주관식 출제를 가미하는 대신에 논술 고사가 폐지되고 대학별로 선지원을 한 이후에 학력고사를 치르는 후시험제로 수정 보완되었다.

그러나 69만명에 이르는 대입 탈락 학생들의 진로 문제가 걸림돌로 대두됨에 따라 1990년 1월 8일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는 고교 졸업생들의 과열 진학 욕구를 해소하고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을 다양화시키는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들로서는 고교후 교육을 다양화시켜 방통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개방대의 독자적 학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대의 질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공단에 기업 공동 사립대를 신설하며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제도나 직업·기술교육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교육 기회를 넓혀 입시병을 치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개혁도 재정 및 제도적 뒷받

침이 있어야 정책화가 가능하며 또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이 있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여섯째, 고도로 경쟁이 요구되는 시험 상황에서 입시전 예기 불안이 고조될 수 있고 입시 실패에 대한 거세 불안이 입시전에 절정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취약점이 많은 수험생들에서 정신 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되기 쉽다.

이와같이 입시 스트레스나 입시 탈락 불안이 청소년들의 인격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정신 장애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동세(1972)나 이길홍(1985, 1988)의 보고 이외에는 발표된 바 없고, 외국 역시 Sarason과 Davidson(1960), Solomon(1974)등의 시험 불안에 대한 연구 이외에는 별로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입시병을 예방하고 근치시키기 위한 처방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2〉

외래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산업화, 도시화, 인구이동,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 및 사회 체제의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받고있는 오늘의 사회 문화 풍토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동이 청소년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21년간(1968－1988)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한 청소년 정신 장애자들의 입원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 정신장애자의 수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입시를 앞두고 입원한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환자중 청소년의 상대적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1 및 표 2〉

전체 정신과 입원 환자 8,916명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은 16.2%(1,445명)이며, 그중 남성은 17.7%(716명)로 여성의 15.0%(729)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표1〉

〈표1〉 최근 21년간(1968－1988년)중앙의대에 입원한
청소년정신장애자의 입원율

	전체환자	남 성	여 성
전체 신경 정신과 입원 환자	8,916명	4,057명	4,859명
청소년층(12－22세)정신과 입원 환자	1,445명	716명	729명
전체중 청소년의 입원 비율(%)	16.2%	17.65%	15.00%

전체 정신 장애자 중 청소년 정신 장애자의 입원 비율과 사회 변동과의 관계를 심층 분석해 보면 1973년(23.1%)과 1972년(22.8%)이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1988년(20.4%) 1980년(19.6%) 1979년(18.7%)의 순서였다. 반면에 1969년(10.7%) 1981년(12.0%) 1984년(12.2%) 1985(12.4%) 1978년(13.1%)엔 입원율이 낮았다.

청소년 정신장애가 증가된 시기의 사회적 변화를 보면 1972－1973년에는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으로 이행하는 정치적 변혁이 있었고 석유파동으로 경제적 곤란이 있었다. 1979－1980년 역시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전환되는 정치적 격동이 있었고, 1988년에는 세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뽑는 제6공화국이 출범하는 정치적 동요가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정치적 변혁기에 청소년 정신장애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2〉

반면에 청소년 정신 장애가 감소된 시기의 사회적 변화를 보면 1969년에는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실시되었고, 1974년엔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 되었으며, 1977－1978년엔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수되고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된 시기이고, 1981년엔 중 고교 과외 금지 조치, 고교 내신 성적 반영, 졸업 정원제 실시로 인한 대학 정원 증가등 교육제도 개혁 조치가 있었고, 1987년엔 선지원 후시험 제도와 논술고사 폐지, 주관식 출제 가미, 대입 입학 정원제 환원 등 교육개혁이 단행 되었다. 이는 교육제도 개편 및 완화 시기나 경제적 안정기에 청소년 정신 장애가 감소하고 정치적 변혁기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표 2〉

〈표2〉 최근 21년간(1968－1988년) 청소년정신장애자의 입원율과 사회변동과의 관계

	청소년 환자수(%)	청소년 비율(%)	주요 사회적 변동 사건
1968년	32	17.7	
1969년	44	10.7	중학무시험 실시, 제3공화국 2차 경제개발
1970년	77	16.6	
1971년	66	16.2	
1972년	71	22.8	제4공화국출범 정치적 격동기
1973년	79	23.1	석유 파동
1974년	62	15.9	고교평준화, 3차 경제개발계획
1975년	63	16.3	
1976년	66	18.2	

이와 같은 청소년 정신장애가 정치적 변혁이나 경제적 혼란 그리고 입시 부담등 사회적 불안 요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청소년 정신장애 예방을 위해 사회 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의 임상 양상을 규명하기위해 1981년 1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용산병원 신경정신과에 입

〈표3〉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

	N	성별		연령별 특성		
		남성	여성	14－15	16－18	19－21
입시스트레스증후군	41	28(68.3)	13(31.7)	10(41.1)	18(43.9)	13(31.7)
대조군	32	21(63.6)	11(36.4)	7(21.2)	12(36.4)	13(39.4)
전체대상	73	49(67.1)	24(32.9)	17(23.3)	30(41.1)	26(35.6)
입시스트레스증후군						
중3병집단	13	8(61.5)	5(38.5)	10(76.9)	3(23.1)	
고3병집단	18	12(66.7)	6(33.3)		14(77.8)	4(22.2)
재수병집단	10	8(80.0)	2(20.0)		1(10.0)	9(90.0)
대조집단						
중3대조집단	7	6(85.7)	1(14.3)	7(100.0)		
고3대조집단	11	6(54.5)	5(45.5)		9(81.8)	2(18.2)
재수대조집단	14	9(64.3)	5(35.7)		3(21.4)	11(78.6)

원한 2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29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24명의 재수생등 모두 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입시 스트레스가 청소년 정신장애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의 비율

	전체환자	81-82	83-84	85-86	87
청소년 입원 환자수 (명)	458	87	104	186	81
수험생 환자수 (명)	73	17	14	19	23
입시병 환자수 (명)	41	8	8	8	18
청소년중 입시병 비율 (%)	9.0	9.2	6.7	4.3	22.2
수험생중 입시병 비율 (%)	56.2	47.1	50.0	42.1	78.3

〈표 5〉 입원년도별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 비율

	전체 청소년	입원년도별 분포			
		81-82	83-84	85-86	87
대상집단	N=73(%)	N=17(%)	N=14(%)	N=19(%)	N=23(%)
재수병	10(13.7)	3(17.6)	3(21.4)		4(17.4)
고3병	18(24.7)	2(11.8)	1(7.1)	6(31.6)	9(39.1)
중3병	13(17.8)	3(17.6)	3(21.4)	2(10.5)	5(21.7)
대조군	32(43.8)	9(52.9)	7(50.0)	11(57.9)	5(21.7)

* $p<.01(x2=6.66, df=1)$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입원한 청소년 정신 장애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험생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49명이고 여학생은 24명으로 남녀 성별은 2.0:1이고, 연령 분포를 보면 18세에서 20세가 4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연령은 17.8+1.9세이다.

2. 입원한 청소년 정신 장애자 중에서 수험생은 15.9%이고 그중 56.2%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정신과이 입원하였다.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을 보면 중3학생이 65.0%로 가장 높고 고3학생 62.3% 재수생 41.7%의 순서이다. 입원 년도별 추세를 보면 입시병 청소년들이 1985-1986

년 42.1%에서 1987년엔 78.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3. 수험생들이 호소하는 주 증상을 보면 두통(32.9%) 위장장애(16.4%) 현기증(16.4%)등 신체적 증상을 흔히 호소하고 있고, 신경과민(27.4%) 우울감정(20.5%)과 더불어 불면증(12.3%)과 자극 과민성(12.3%)으로 인해 사소한 자극에도 흥분과 극도의 무력감으로 인해 학교를 조기에 포기하거나 정서적 혼동 상태에 빠져 타인을 비난하고(15.1%)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며(13.7%)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는(10.0%)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입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 못할때 반동적 행동으로 청소년 가출, 무단 결석, 약물남용, 자살, 비행등 제반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4. 다면적 인성 검사 소견과 병전 인격 그리고 임상 증상을 종합 분석해 볼 때 강박 성향이나 불안 성향 그리고 내향화 성향이나 경쟁 심리와 입학시험 스트레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수 있다.

5. 입시별 집단은 대조군에 비하여 정서적 혼돈 상태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특히 학교 생활의 변동과 같은 생활 변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흔히 신경 과민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봄철 신학기 초에 부모와 함께 내원하여 개방 병동에 자의 입원하는 비율이 높고, 지지 정신 요법이나 집단 정신 요법을 통해 호전되어 개방 병동에서 퇴원하지만 재입원율은 높다. 강박성 인격과 같은 인격장애를 갖고 있고, 경쟁심은 강하지만 내성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

6. 재수병 집단은 대조군에 비하여 외인성 불안 성향이 높고, 적개심이 많지만, 내인성 우울 성향은 낮으며, 경계선 인격을 지닌 경우가 많고, 건강 악화등 생활 변화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신경 과민 증세나 우울 증세를 흔히 호소하고 있고, 비교적 장기간 입원하는 경향이 있다.

7. 고3병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적 혼동과 같은 정신 병리적 문제점을 보여준 경우가 많고, 주체성 정립에 있어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강박성 인격과 같은 인격상의 문제로 인해 병전 적응 능력이 원만하지 못하고, 중정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신경증적 장애 및 정동 장애 진단하에 학기초인 3—4월에 입원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원중에 치료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려는 저항을 보여 주고 있고, 단기간 입원하였다가 치료자의 지시를 거역하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

〈3〉

입신 출세를 위해선 과거에 합격해야 하듯이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는 전통적인 이상 교육열과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선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강박적인 교육열, 업적과 간판을 중요시하며 대학을 나와야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냉혹한 사회적 현실은 출혈을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 한다는 빗나간 사고 방식을 갖게 해준다. 지방보다는 서울을,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 보다 국립 대학을, 후기보다는 전기를, 전문대학 보다는 정규 대학을, 일류 대학을 가지 못하느니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는 비정상적으로 비대된 일류 집착증은 어린 청소년들의 마음에 입시 탈락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있다. 더우기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원과 한을 자녀를 통해 대리 충족하려는 한풀이식 욕구나 허영심으로 인해 과욕을 부릴 때는 자녀의 학업 능력에 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켜 과중된 대학 입시에 찌들린 기형적인 청소년을 양산하는 모체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에 비해 몇년 더 공부를 했고 시험치는 요령이나 담력이 붙어 오히려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재수생들이 계속 재수를 되풀이 하다 패배의식만 지닌채 입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인지 구조가 낙방하기 쉽도록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나 재수를 결심할 때는 1년만 부단히 노력하면 다음번에는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재수 기간동안의 고달픈 가시밭길을 걸어 온 것이다. 자신 스스로 다음번엔 분명히 합격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막상 시험 기일이 가까워지면 그 순간부터 또 떨어지면 큰일이라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 재수후에 비록 실력은 향상 되었지만 낙방후에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경우의 부모님의 실망이나 주위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원가나 도서실을 전전해야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고통때문에 입시 부담이 가중되어 낙방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비례적으로 커지게 된다. 그런 상상을 하다보면 죽어도 합격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들고 다시 낙방후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서 3수나 4수의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된다.

서울 청소년회관의 재수생 실태조사(1977)를 보면 재수 생활중 반수 이상이 불안 긴장감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고, 특히 체중이나 시력·안색이 평소보다 나빠진 사람이 많았고 식욕도 없고 원기도 부족하며 주의집중이 안되고 소화능력도 저하되고 운동 감각도 나빠졌다고 호소하며,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 초조하며 자기혐오, 열등감, 소속감 결여, 자제력, 부족 결단성 부족으로 괴로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필자의 입시병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재수병 집단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고3병이나 일반 학생에 비해 최근 학교에서 생활 변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과민해지고 불안해져서 정서적으로 혼돈상태에 빠져 봄철에 입원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 요법이나 집단 정신 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은 외인성 불안 집단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 진단 : 재수병 집단에서는 약물 의존이 많고 반면에 고3병 집단은 정동 장애나 신경증적 장애가 많았다. 그리고 병전인격을 보면 재수병 집단에서는 경계선 인격이 30.0%로 많았고 반면에 고3병 집단에서는 강박성 인격이나 분열성 인격이 많았다.

임상 증상 : 재수병 집단에서 신경과민 증세나 우울 감정을 60%에서 호소한 반면 고3병 집단에서는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16.7%로 많았고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병전 적응수준 및 스트레스 정도 : 재수병 집단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은 반면에 고3병 집단은 중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수병 집단에서는 건강 변화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대조군은 경제적 변화나 가정과 연관된 생활 변화로 인해 입원한 경우가 많았다.

입·퇴원 양상 : 재수병 집단은 1—2월 사이에 입원하여 장기간 입원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고3병 집단은 3—4월 신학기에 단기간 입원한 경우가 많다.

다면적 인성 검사 소견 : 재수병 집단에선 적개심이나 공격심 지수가 높고 사회적 내향성 척도 점수가 낮은 편이다. 한편 코드 프로파일을 보면 재수병 집단은 8143796—250/F/KL로서 공격적이고 적개심에 가득차 있는 사회병질자의 프로파일을 보였으나 반사회적이라기 보다는 불안이 심한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고3병 집단은 867—2104935/F/LK의 정신병적

profile로서 자주 피로를 느끼고 주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약화되어 있고, 흔히는 현실로 부터 철퇴되어 자신만의 공상에 빠져있는 인성 검사 소견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신과에 입원한 24명의 재수생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학생들의 발병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개 유형이 있다.

1) 지나치게 꼼꼼하고 세심하여 완벽성을 추구하는 '강박적 성향'이 강할수록 취약점이 있다.

2) '내성적 소심형' 학생에서도 입시 스트레스를 외부로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해 잘 생긴다.

3)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소원과 맺힌 한을 자녀를 통해 풀려는 '과잉기대' '과잉보상형' 부모의 자녀인 경우도 잘 생긴다.

4) 자만심에 빠져 자신의 능력에 힘겨운 일류대학 일류학과 만을 추구하는 '일류집착증'에 빠진 경우

5) 장래의 진로 선택에 있어 자신과 부모간 갈등이 심해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이지만 우선 붙고 보자는 '안전 하향 지원'을 하여 입학 한후에 후회와 번민속에 휴학과 재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기 쉽다.

한편 정신과에 입원한 재수생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입시 스트레스증후군에 빠져 입원하기 쉬운 재수생들의 임상 유형을 분석해보면 권태형 • 공허형 • 불안 초조형 • 탈진형 • 절망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권태형 : 단조롭게 반복되는 입시 준비 생활에서 오는 일종의 무력 상태로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흔한 슬럼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열띤 논쟁으로 후련하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주말 여행이나 운동 경기 관람등을 통해 신선한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면 이내 회복될 수 있다.

2) 공허형 : 입시로 인해 평소 좋아하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서 오는 공허감으로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일류 대학에 가서 무엇하나?' 등 입시에 대한 회의와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는 주체성 혼돈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3) 불안 초조형 :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시험공포증에 시달리는 경우인데 마음만 급해 우왕좌왕하고 시험중엔 막상 아는것도 틀려버리는 악순

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엔 과도한 시험 불안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근본 동기가 되는 원인적 요인을 찾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4) 탈진형 : 시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능력이나 체력을 적절히 안배하지 못하고 몰아치기식 공부를 하며, 때로는 타이밍이나 커피, 콜라 등 각성제까지 남용하면서 무리한 강행군을 하는 유형으로서 입시 전략을 수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쉽게 회복될 수 있다.

5) 절망형 : 계속된 성적 부진에 의해 사기가 저하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극도의 무력감과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러한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진 경우엔 부모나 교사들이 무조건 비난과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여 잠재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4〉

입시 전쟁과 지옥으로 비유되는 이 암담하고도 길고 긴 터널을 한번도 아닌 두번 세번씩 통과해야할 비진학 미취업 재수생들이나 학부모들로선 입시 스트레스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 수 없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데로 걱정이고 못하면 못하는데로 걱정일 수 밖에 없는 이 속수 무책의 입시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은 무엇인가?

입시를 치뤄본 수험생이나 학부모치고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고 매년 입시제도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각종 묘방을 짜는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입시의 병폐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책이 무섭다, 학교에 가기 싫다" "시험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늘 나라엔 입시 지옥은 없겠지"하는 유서를 남긴채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음독을 하는 중고생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대학의 문턱은 날로 높아만 가며 매년 7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재수생이 되어 고민과 방황의 날들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의 한국적 사회 문화 풍토속에선 입시병의 병폐가 망국적인 병인 AIDS나 악성 종양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열된 교육 열기를 진정시켜 입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하루속히 찾아야겠다. 이에 필자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우선 사회 정치 경제적 변동이 청소

년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또한 정신과에 입원한 수험생들의 임상 양상을 심층 분석하여 입시병의 실상을 규명 하였으며, 아울러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심리 행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입원 정신 장애자의 수효는 20년전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전체 정신 장애자중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환자중 수험생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입시병 환자의 비율도 '85-86년 42.1%에서 1987년엔 78.3%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입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정신 장애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정치적 변혁이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될때 증가하고, 반면에 교육제도 개편 및 완화 시기나 경제적 안정기에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신장애 예방을 위해 사회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넷째,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중3병 고3병 재수병 등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복합 증후군으로 강박 성향이나 불안 성향 그리고 내향화 성향이나 경쟁심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러한 입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때는 반동적 행동으로 무단 가출, 무단 결석, 약물 남용, 자살 및 비행행동을 할수 있으므로 시급히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재수병 집단의 임상 양상을 보면 고3병이나 일반 학생에 비해 최근 학교에서 생활 변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과민해지고 불안해져서 정서적으로 혼동 상태로 인해 경계선 인격을 지닌 경우가 많고, 가족요법이나 집단 정신 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은 외인성 불안 집단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

여섯째, 정신과에 입원한 재수생들의 발병 동기를 분석해 보면 '강박 성향'이나 '내성적인 소심형 성격' '과잉 기대 및 과잉 보상형 부모와의 갈등' '일류 집착증' '안전 하향 지원한 수험생의 후회 심리'등으로 인해 발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지도에 있어 부모나 교사들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이상 심리에서 학교를 선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계몽할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정신과에 입원한 재수생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입시스트레스증후

군에 빠져 입원하기 쉬운 재수생들의 임상 유형을 분석해보면 권태형·공허형·불안 초조형·탈진형·절망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이들의 문제에 대해 비난과 질타를 할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험 기간 중에 겪고 있는 슬럼프 증세를 파악하여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중3병 고3병 재수병등 입시스트레스증후군의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입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수험생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 주기 위한 상설 상담 기관이 증설되어야 하겠고, 특히 입시 탈락 수험생의 진로 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해당 고교 담임 교사가 졸업후에도 월1회씩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로 지도를 하여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둘째, 전문 학교에 합격된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재수를 하는 청소년들의 재수 의욕을 줄여주기 위해 전문학교를 일반 대학으로 호칭 변경하고 졸업후 대졸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정착됨으로서 대학 정원이 2배로 늘어날 수 있고 전문대생의 열등의식을 줄여주어 재수를 막는것은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식수준만을 평가하는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과정에서 현장 실습 과정에서의 사회성 점수를 산출하여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교육 과정에서 사회 봉사 활동이나 상벌 경험들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학생들의 품행과 정서교육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교육체제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겠다.

Ⅲ. 非進學 · 未就業 靑少年의 發生原因 分析

1. 設問紙 및 意見書 分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연구 및 관련문헌을 통하여 밝혀진 원인 영역들과 관련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문지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반응과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해 보았다. 설문지를 통한 원인 분석, 영역 구분 및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설문지 분석결과 참조).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접근 방법에 있어 교육내적 요인들과 교육외적 요인들로 구분하였는데, 교육외적 요인영역에 사회구조적 요인영역과 국민의식적 요인영역 구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둘째, 교육내적 요인으로서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입시제도상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교육인구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만이 있었다. 또한 교육내적 원인을 교육과정내의 측면과 교육제도의 측면으로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교육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회 구조적 요인들과 국민의식적 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세째, 교육외적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것은 국민의식 구조의 측면이었으며, 취업구조상의 요인들, 임금구조상의 요인들이 우선순위로 지

적되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원인으로서 의식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우선 취업구조 및 임금구조 대책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설문지 분석을 바탕으로 발생원인들을 교육내적 요인, 취업 및 사회구조적 요인, 의식구조적 요인으로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의견서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제시되었던 주요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내적 요인
   1)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운영으로 인한 비진학자 및 학습부진 학생 소외현상
   2) 개인의 적성 계발 및 잠재력 개발 실패(선택과목 부족)
   3) 영어·수학 과목중시, 지식위주 평가체제로 전인적 발달 저해
   4) 교육과정 운영의 비효율성 및 진로지도 교육의 비효율성
   5) 고등 교육기회의 한계
   6) 단선형 교육제도
   7) 인문고의 과도한 팽창
   8) 평생교육 체제 미흡
2. 취업 및 사회구조적 요인
   1) 고용기회, 임금, 승진 등 학력위주(고학력선호)
   2) 인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능력 및 취업기회 부족
   3) 학교이외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책 부족
   4) 취업정보의 미비 및 홍보활동 부족
   5) 열악한 취업조건
3. 국민의식적 요인
   1) 개인주의적 교육열
   2) 출세를 위한 도구적 교육관
   3) 물질만능, 권력만능의 가치관
   4) 고학력 선호의 과시적 혼인풍조
   5)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
   6)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및 언론의 탈선조장과 관심저조

2. 分析模型의 設定

상기 요약된 요인들은 문제의 요인들을 필요이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대책연구의 후기단계에서는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을 보다 조직적이고, 심층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중점적 원인들을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발생 원인

관 련 영 역	관 련 요 인 구 분	세 부 관 련 요 인
1. 교육내적영역	1) 교육제도의 측면	• 입시제도의 결함 • 단선형 교육제도 • 인문고의 과도한 팽창 • 고등교육 기회 제약(경직된 정원 정책) • 취업이후 진학의 사실상 불가능
	2) 교육과정의 측면	•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운영 • 진로지도의 취약 • 인문고 및 실업고의 과학기술교육 미흡 • 산학협동의 취약성
2. 취업 및 사회 구조적 영역	1) 취업구조의 측면	• 취업기회의 부족 • 고학력 중심의 채용 요건
	2) 임금제도의 측면	•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 • 임금 및 승진상의 학력간 격차 • 고졸학력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 희박(일류학교 출신자의 우대)
	3) 기타 사회구조의 측면	• 학교이외의 청소년 프로그램 부족 • 취업정보 미비 및 홍보활동 부족 • 군입대 연령상의 문제 및 재수학원의 난립

관 련 영 역	관 련 요 인 구 분	세 부 관 련 요 인
3. 국민의식구조적 영역	1) 사회풍토적 측면	• 학력을 명예로 생각하고, 능력이나 업적의 등가물로 생각하는 의식구조
	2) 부모의 과열 교육열	• 고학력선호의 과시적 혼인풍조 •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 및 과외수업 풍조
	3) 부모의 무관심 및 정책적 배려 측면	• 학부모와 학교교육의 연계성 부족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및 언론 대책 미흡

3. 細部 關聯要因 分析內容

1) 설문지 분석결과

1. 다음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문제점중 어떤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이들로 야기되는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 질문에 대한 18人 전문가들의 의견분포는 다음과 같다.

순 위 / 항 목	1	2	3
가. 개인의 능력 잠재력 발휘 기회 제약	11	2	5
나. 유휴인력에 따른 국가적 손실	1	10	7
다. 일부 청소년의 범죄 유발	6	6	6

가—다—나의 순위로 지적된 바와 같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타의견들을 참조해보면 청소년시기의 열등 소외의식 등 심리적 좌절감

은 trauma를 초래하여,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물질만능주의 학벌주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으로 발전, 사회불안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

2. 다음 집단중 사회정책으로 가장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집단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문제의 대상집단을 5가지로 구분했을때, 취업희망 무직자－재수생－탈선재수생－미진학우수학생－재수포기자의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적되었다.

항목 \ 순위	1	2	3	4	5
가. 재수생	4	2	1	5	5
나. 탈선 재수생	2	3	8	2	1
다. 재수 포기자	1	5	4	2	3
라. 취업희망 무직자	9	4	•	4	1
마. 미진학 우수학생	2	3	4	3	5
MISSING	•	1	1	2	3

취업희망 무직자에 대한 사회대책으로서의 취업기회 확대 필요성이 집중 거론되었고, 의견서중에는 비행 및 탈선재수생 대책 및 가계빈곤으로 인한 미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Radio에서는 중졸 또는 중퇴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TV에서는 고졸 또는 고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다뤄왔다.
본 연구 참여자의 견해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중졸자에 동의하고 있다.

집단구분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f	14	4
%	73.3	26.7

기타의견으로서는

* 고졸자가 심각하다는 견해로서, 상대적으로 중졸자는 고교진학으로 대부분 흡수되고, 단순노동등에 취업이 용이하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 중졸자가 심각하다는 견해로서, 가치관의 미정립 기초능력(basic skills)의 부족 등으로 비행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이 제시되었다.

의무교육 확대조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의견서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성, 토론에서는 고교까지 의무교육 확대론 등이 대두되었다.)

4. 청소년문제 발생원인중 교육내적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교육내적, 교육외적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교육내적 요인으로서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항 목 \ 순 위	1	2	3
가. 교육인구 증가의 문제	2	3	13
나. 입시제도상의 문제	7	6	4
다. 교육과정상의 문제	9	8	
MISSING	•	1	1

교육과정상의 문제— 입시제도상의 문제— 교육인구 증가의 문제로 나왔는데, 교육내적 원인을 교육제도의 측면과 교육과정내의 측면으로 범주화를 정련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대책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회대책과 국민의식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청소년문제 발생원인중 교육외적 요인으로서 가장 주요한 것은?

교육외적 요인으로는 국민의식구조의 측면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항 목 \ 순 위	1	2	3
가. 취업구조상의 문제	6	7	4
나. 국민의식구조의 측면	11	3	4
다. 임금구조상의 문제	1	7	9
MISSING	•	1	1

국민의식구조의 측면— 취업구조상의 문제—임금구조상의 문제의 순위이며 기타의견을 참고해보면 遠因으로서 의식구조상의 문제가 근본으로 장기대책을 요한다.
우선 취업구조, 임금구조대책을 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6. 비진학·미취업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사회대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항 목 \ 순 위	1	2	3
가. 교육대책	5	6	6
나. 사회대책	7	7	3
다. 학부모의 의식구조 개선대책	6	4	8
MISSING	•	1	1

사회대책—학부모 의식구조 개선대책— 교육대책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사회·가정·학교가 연계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 대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7.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대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대책으로서, 제시된 항목은 가— 나— 라— 다— 마— 바의 순위로 지적되었다.

항 목 \ 순 위	1	2	3	4	5	6
가. 고교 진로교육 강화(기술교육 강화)	7	2	3	3	2	•
나. 실업고교 증대(목적고설립)	4	6	1	1	4	1
다. 대학정원 대폭증가(야간제, 계절제)	2	4	4	•	4	2
라. 고등교육 기회확대(방통대, 개방대등)	4	1	4	3	3	1
마. 입학전형방법 개선	1	1	1	3	3	7
바. 전문대 정원증가	•	3	4	7	•	2
MISSING	•	1	1	1	2	5

기타의견에서, 중등교육 정상화(인간교육, 진로지도충실 등 광범위 논의)가 집중 거론되었고, 대학의 과감한 문호개방, 입학후 엄격한 학력관리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민의식구조와 관련하여, 자동진급제 진학적령관등 인습적 사고의 재검토와 개선의 방향탐색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대입선발에 있어 대만의 경우와 같은 Pooling System의 시사점이 거론되었다.

8.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대책중 가장 시급한 것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대책으로서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견해가 압도적이고, 가— 나— 다— 라— 마— 바의 순위로 집계되었다.

항 목 \ 순 위	1	2	3	4	5	6
가. 취업기회 확대	11	2	3	•	•	•
나. 고용조건 개선	2	7	4	2	•	1
다. 직업훈련기회 확대(직업훈련공영화)	2	5	8	1	1	•
라. 기업체 공동설립 기술대학 권장	2	2	1	7	2	2
마. 재수학원 정비 및 재수생지도강화	1	•	1	•	8	4
바. 군입대 적령 조정(조기입대 가능)	•	1	•	5	2	6
MISSING	•	1	1	3	5	5

기타, 기업체 자체직업훈련기관 설립의 확대 및 학력인정, 청소년 산업체이윤의 사회환원, 싱가폴의 Community Center도입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취업준비의 산학협동 모델개발의 필요성과 재수학원의 교외이전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9. 과열된 입시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식구조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출세주의적 직업관, 노동천시사상 등)

국민의식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문숭상(학벌주의)의 가치관
2. 자녀의 적성,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부모의 과욕(恨풀이 의식)
3. 출세주의적 직업관, 대학을 계층이동의 수단시
4. 황금만능주의, 물질우선의 사회풍토
5. 일부계층의 상대적 빈곤감 피해의식 등

10. 왜곡된 교육열 해소를 위한 국민의식구조 개선의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대책과 관련하여)

국민의식구조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는 물질 배금주의 사상을 막고, 인간중심주의·생명중심주의 사상을 교육·언론을 통해 계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언론의 여론환기역할 담당 등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 언론대책으로 다양한 직업세계 소개, 고졸자 성공사례 소개, 대중매체를 통한 일하는 즐거움 간접경험, 인물소개시 학력보다 경력중심으로 소개, 기업에서 학력에 따른 고용차별을 철폐하도록 기업가를 계도, TV에서의 진로지도 등이 제시되었고,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부모운동 전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 의견서 결과 및 자료요약

가. 문제점 및 원인

1. 교육내적 요인

1)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운영(부정적 자아개념, 주입식 교육 등)

2) 개인의 적성 발견 및 잠재력 개발 실패
3) 중등교육의 구조적 모순(과밀학급, 대규모학교, 교육환경 열악 등)
4) 고교졸업자의 취업기회 제한 및 접근의 어려움(진로지도교육의 비효율성).
5) 결과지향적 교육평가
6) 대학(고등)교육 기회의 한계
7) 학교교육제도의 경직성
8) 대학교육이수의 파행적 운영(입학곤란, 졸업용이)

2. 취업 및 사회구조적 요인

1) 고용기회·임금·승진 등 학력위주(고학력 선호)
2) 인문계(고교)졸업자의 취업능력 및 취업기회 부족
3) 학교이외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책 부족
4) 취업정보의 미비 및 홍보활동의 부족
5) 열악한 취업조건

3. 의식구조적 요인

1) 능력위주의 경쟁지향적 교육관
2) 출세를 위한 도구적 교육관
3) 가치관 문제(물질만능, 권력만능)
4) 대학 미진학자의 열등감, 패배의식 고조
5) 소수정예를 위한 대학관(양적 팽창, 질적 저하)
6) 고학력 선호(특히 인문숭상)
7)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8) 매스컴의 탈선조장 및 관심저조

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대안

1. 교육대책

가. 교육기회의 개방과 학대

1) 대학정원제의 점진적 폐지 및 입학정원의 자율화(야간제, 계절제운

영등)

2) 대학 편·입학 제도의 개방화

3)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양한 원격교육을 통한 학위취득기회 확대

4) 대학의 계속 교육 및 대학확장프로그램 개발

5) 무학자에 대한 학위취득방안 제도화

나. 교육재정의 총량규모 증대

1) 대학의 엄격한 질적관리(학력인정제도 실현)

2)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3) 저소득, 극빈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확충

다.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특성화 도모

1) 실업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증설 및 충실화

2)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병설운영

3) 진로지도강화

4) 전인교육강화

5) 대입 전형방법 개선

2. 취업 및 사회대책

가. 취업기회의 확대와 직업교육 강화

1) 기업체의 고용증대(고졸이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일정비율 책정)등

2) 산업체 부설학교의 증설

3) 기업체별 특별교육 program개발과 해당학력인정제도(학사 및 석사)

4) 기업체별 다양한 「고용예비생」을 위한 직업훈련 program개발과 정부의 지원(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5) 군복무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의무화

6) 직업훈련원 확충과 다양한 취업훈련 program개발과 지원(정수 직업훈련원등)

7) 지역별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나. 고용조건의 개선과 산학협동 강화

1) 학력간 고용기회, 임금, 승진 등 인사정책상 차별의 극소화
2)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기업들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이윤의 환원
3)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대학진학에의 우선과 수학시 학력인정등 혜택부여
4) 대학이수시 학비보조 및 수료시 대학학력 인정 등 인사상의 혜택 부여

다. 평생교육 확충과 삶의 질 향상

1) 각종 기술학원의 활성화
2) 대학·기업체·언론기관 및 자원단체의 평생교육 program의 활성화
3) 「사회교육법」의 온전한 시행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4) 기업체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program모델 개발

라.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과 복지대책 활성화

1)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2) 청소년문제 전담연구소 및 대학 연구기능의 강화
3)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센터 설치·운영
4) 사회체육과 관련하여 건전한 청소년놀이와 여가선용기관 확충
5)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금지 기준의 설정과 엄격한 시행

3. 학부모의 의식개혁 대책

가. 건전한 사회풍토의 진작

1) 학력본위의 고용풍토 개선
2) 출세주의적 직업관의 타파
3)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이해 노력 제고
4)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 전개

나. 학부모의 교육관 및 사회관 정립

1) 학부모의 진로지도 능력 함양
2) 자녀의 적성·능력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

3)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학부모의 과욕 불식

다. 언론매체의활용

1) 학부모 계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2)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건전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공급

3) 제도개선을 위한 언론의 여론환기 역할 제고

Ⅳ. 非進學·未就業 靑少年 問題解決을 爲한 對策方向과 具體的方案

1. 敎育對策

1) 高等敎育 門戶開放과 擴大方案

대학교육의 문호개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고등실업자"의 양산과 그로 인한 또다른 사회문제의 유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 대부분인데 고등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일종의 낭비이며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라는 점도 이유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고등교육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에 맡기고 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미 고등교육도 모든 시민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해야 하며,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후기중등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닌 대중교육, 보통교육으로 간주한다. 대학교육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교양인, 생활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어느 학자는 "2000년대는 80%의 직업이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상의 여러가지 변화를 고려할 때 폭발적인 고등교육에의 사회적 욕구를 더이상 물리적·제도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한 그로 인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청소년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마련함이 옳다. 이는 이미 교육개혁심의회나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의 건의나 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1) 대학 및 학과 신·증설을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학생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여기서 대폭적인 신·증설이 허용된다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은 필요하다. 즉 인구와 지역안에 학교종류 시설 및 설비기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다.

가. 인구 5만명 이상의 시·군 단위로 개방형 전문대학을 설치하고, 각 시·도 단위에는 방송통신대학과 4년제 개방대학을 설치한다.

나. 대학설치기준령에 합당한 대학은 정원조정과 학과신설을 완전 자율화하되, 평가인정제를 통하여 엄격한 감독을 한다.

다. 국가적으로 인력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원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분야는 없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의사와 약사가 필요하고, 면단위마다 치안판사와 변호사가 필요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면 이상적이라고 할 때 부족하지 않은 분야는 없으며, 인력수급을 특별히 국가가 통제할 영역은 없을 것이다.

(2)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은 적극 권장사항으로 지켜지게 한다.

가. 지역주민에 대한 입학 우선권(가산점)부여

나. 사회봉사 경력, 군필경력, 직업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과

다. 10년이상 직업경력자는 정원외에 무제한 입학 허용(대학별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라. 전문대 졸업후 직장 확보자는 4년제 편입 무제한 허용(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마. 방송통신대학은 모든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 완전 개방하고 지원자 전원 수용토록 한다.

(3) 모든 개방대학에 계절제, 야간제, 정시제를 병설하고, 일반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경우도 희망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4) 모든 대학에 청강생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학칙에 따라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심사후 정규학생으로 편입시키거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다.

(5) 모든 재학생의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6) 학사편입은 무제한 허용한다.

(7) 산업체의 단독 또는 합동 부설 기술대학의 학력을 인정한다.(평가인정 체제 도입)

이상에서 제시한 대학교육 문호개방을 위한 대책은 교육개혁심의회의 안이나 교육정책자문회의 방안 등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개혁심의회나 교육정책자문회의의 보고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청소년문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후의 인력수급문제는 다소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2000년대에는 새로운 고급인력 수요가 현재의 고졸인력 수요와 맞먹을 정도로 팽창할 것이다. 설령 그러한 예측이 다소 빗나간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의 문호개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진학을 못함으로써 절망과 실의와 좌절에 빠져 비행과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의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까지 적어도 5년이상 연장하여(대학 재학기간과 군복무기간) 보다 성숙한 성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문제는 이미 문제가 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는 청년문제 또는 고학력 실업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새로운 고급인력 수요의 창출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민의식의 개조를 통하여 불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육이 누구나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교양과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 흔히 말하는 봉급생활자가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택시기사가 될 수 있으며, 우편배달부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보다는 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다 좋은 시민이 되며, 보다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만 충족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대학 졸업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려는 기업인들의 생각이나 대학 졸업자를 며느리로 맞고 아내로 맞겠다는 생각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르고 그만큼 낫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그만큼 대학교육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증거다.

택시기사가 대학졸업생이면 그것은 인력낭비이며, 경제적 손실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나 되며, 꼭 대학을 나와야 가능한 직종은 얼마나 될 것인가? 논리야 어떠하든지 인위적으로 대학교육기회를 봉쇄하려는 발상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고, 기본욕구를 강제로 억누르는 일이며,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이다.

물론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지적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아무리 평등사회요, 기회균등이 보장된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성과 능력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학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영어나 수학실력은 매우 부족하지만 음악적 소양이 뛰어나면 예술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는 데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식개혁과 용기가 필요하다. 대학은 소수 엘리트 양성기관이 아닌 대중교육의 장이다.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센터로써, 누

구나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시에 대학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시에 문을 활짝 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간한 용기가 없이는 어렵다.

그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앞을 내다보면서 비난을 감수할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2) 中等教育過程의 正常化 方案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비진학,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적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중의 20-30% 정도만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나머지 70-80%는 아무런 대책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이들 대다수의 인문계 졸업자는 진학하고자 하나 진학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나 아무런 교육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취업도 못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20—30%만이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대학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들 70-80%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대책이 있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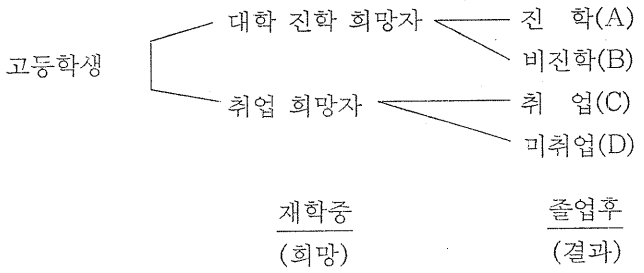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의 실제는 다음과 같은 통념하에 움직여지고 있다. 즉, 일반계(속칭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시키는 곳이고, 실업계(농, 공, 상, 수산계열)는 고교 졸업후 취업을 목표로 교육하는 곳이란 인식이다. 이런 인식에 대다수 국민이 물들어 있지만, 이런 인식이 결코 옳고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외국에는 프렙스쿨(Prepschool)이란 게 있다. 속칭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학교란 뜻이다. 대다수의 이런 예비학교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사립이다. 전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하여 그 수가 매우 적다. 집안이 부유하고 동시에 자녀의 대학교육이 유달리 관심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런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 일반계 고교 졸업자중 대학진학자는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지 못

한다. 만약 우리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 예비학교의 성격을 갖는다면 20—30%를 위한 교육에 이의를 달 까닭이 없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의 성격을 갖는가? 구조적으로 30%만 입학가능하고 70%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아무리 예비학교라고 고집해도, 그렇게 보아줄 수가 없다. 70%가 구조적으로 탈락되어야 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30%만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70%를 희생양으로 당연시하는 셈이다. 오히려 일반계는 이제 30%를 위한 교육에서 70%를 위한 교육으로 그 기본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70%에 두고, 그런 교육중에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고급의 학습과정을 보충, 추가함으로써 학문적 수요성을 발휘토록 도와 주어야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고등학생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 네가지 흐름중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



이 네가지 흐름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는 (A) 집단만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B), (C), (D)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전무하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C)집단만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A), (B), (D) 집단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일반계 고교의 설치 이념을 대학입학이라고 보면 (B), (C), (D)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를 취업을 위한 교육에로 한정시키면 (A), (B), (D) 역시 고려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학제의 근간은 단선형이다. 교육단계중의 어느 때이건간에 동일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록 실업계

라 할지라도,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진학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 또 비록 일반계라 할지라도,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선형 교육제도의 장점이다. 이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등학교제도는 실질적으로는 단선형의 장점을 못 살리게끔 운영되고 있다. 단선형제도의 교육이념이 살아나도록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본다.

(1)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학입학 시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 활동, 성적기록이 대학입학의 전형자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결코 영, 수, 국 등에 대한 선발시험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 영, 수, 국 등의 도구 교과목이 대학입시에서 과잉 비중을 갖는 일이 없어야 한다.(대학전공에 따라, 과목별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

(2) 일반계의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선발고사 준비 위주가 아닌, 교육과정상의 교과목 전체에 대한 고르고, 광범위한 학습에 치중되어야 한다.

— 성적 우수자 30%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평균 수준의 학생(석차 50%)에 맞춘 수업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 영, 수, 국에 대한 획일적 치중이 아니라, 자기의 적성과목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3) 실업계 고교의 경우 취업의 기회와 기업체의 요구에만 호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동일분야의 대학진학 가능성도 키워주면서 취업계통에 고른 관심과 적성이 발현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은 대폭 시정되어야 한다.

— 실업계 고교내에서의 전공변경이 학교간, 또는 동일 학교내에서 가능해야 한다.

(4) 일반계 고교생들에 대한 취업준비를 교육과정상 대폭 반영한다.

— 고교 2학년 2학기부터는 교외 취업준비 학관의 수강을 허용한다.
(타자, 경리, 컴퓨터 등)
예 : 오전에 학원수강, 오후 학교수업 등

— 기업체, 관공서 등에의 참여 실습 등을 권장, 권유한다.

(특히 부모나 친족의 기업체에 실습토록 권유함)

(5) 실업계와 인문계의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로 전학을 수 있게 하고 또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로 전학갈 수도 있게 함.(이수과목의 상호 인정)

—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고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게 함.

(6) 현행 학력고사에서 이과, 문과의 배점 비중의 차이를 최소화 시킴.

— 수학배점이 이과의 경우 75, 문과의 경우 55점임. 또 국어의 경우 그 반대임. 이런 획일적 비중치 부여는 교육과정운영을 훼손시키고 있음. 영, 수, 국 만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가 자신있는 과목에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비중치의 자율적 선택이 필요함.

(7) 고등학교에서의 교과목 수는 현행 27개에서 23—24개로 줄여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야 한다.

— 교련과 체육의 통합

—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통합

— 국어, 문학, 작문, 문법, 한문의 축소와 통합등

(8)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 암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혜의 습득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100권이상의 필수독서목록을 제시하고 읽게 함.

— 각종 사회봉사활동, 사상경험등을 격려하고 고취시킴.(대학전형에 반영)

— 학교내에서의 봉사경험(반장, 학생회장)을 높이 평가 해줌.

(9) 소풍, 수학여행, 실험·실습, 학내외 체육행사등을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학교전체의 축제와 행사가 되도록 고취한다.

— 학교행사에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동참 고취

— 학내에서의 학생 선·후배간의 인간관계 교류 증진

— 학교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토록 유도

— 학생들의 지역사회 일에의 참여, 관심 및 교류 증진

2. 취업 및 사회대책

1) 취업기회 및 훈련기회 확대 대책

가. 청소년을 위한 취업기회의 확대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할 수도 없고 취업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문교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709,889명중 대학 진학자는 249,776명으로 약 35%에 해당되고, 취업자는 239,200명으로 약 33%에 해당된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직자와 미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전체 졸업자의 약 30%로서 약 22만 가량이 된다. 〈표-1〉

〈표-1〉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상황('89)

구분 \ 계열	일반계	실업계					총계
		농림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	소계	
졸업자	450,118 (63.4)	16,757	63,605	142,677	3,338	226,377	676,495 (100.0)
취업자	45,588 (10.1)	13,164 (78.6)	53,454 (84.0)	117,283 (82.2)	2,693 (80.7)	186,594 (82.4)	232,182 (34.3)
진학자	225,048 (49.9)	1,370 (8.2)	6,337 (10.0)	4,624 (3.2)	321 (9.6)	12,652 (5.6)	237,700 (35.1)
무직자	64,567 (14.3)	662 (4.0)	877 (1.4)	8,950 (6.3)	100 (3.0)	10,589 (4.7)	75,156 (11.1)
임대자	1,927 (0.4)	280 (1.7)	356 (0.6)	649 (0.5)	57 (1.7)	1,342 (0.6)	3,269 (0.5)
미상	112,988	1,281	2,574	11,171	167	15,193	131,450

구분 \ 계열		일반계	실업계					총계
			농림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	소계	
직업별	전문·기술직	1,885 (4.1)	1,088 (8.3)	27,597 (51.6)	3,010 (2.6)	363 (13.5)	32,058 (17.2)	33,943 (14.6)
	행정·관리직	1,395 (3.1)	91 (0.7)	217 (0.4)	4.734 (4.0)	—	5,042 (2.7)	6,437 (2.8)
	사무직	8,415 (18.5)	266 (2.0)	691 (1.3)	68,652 (58.5)	82 (3.0)	69,691 (37.3)	78,100 (33.6)
	판매직	5,819 (12.8)	681 (5.2)	412 (0.8)	12,681 (10.8)	88 (3.3)	13,862 (7.4)	19,681 (8.5)
	서어비스직	7,010 (15.4)	1,013 (7.7)	787 (1.5)	10,041 (8.6)	38 (1.4)	11,879 (6.4)	18,889 (8.1)
	농업·임업·어업·수산업	2,577 (5.7)	5,101 (38.7)	846 (1.6)	697 (0.6)	1,594 (59.2)	8,238 (4.4)	10,815 (4.7)
	생산직·운수장비·운전사·노무사	14,542 (31.9)	4,095 (31.1)	21,751 (40.7)	13,473 (11.5)	458 (17.0)	39,777 (21.3)	54,319 (23.4)
	분류불능직	3,595 (7.9)	777 (5.9)	364 (0.7)	3,848 (3.3)	48 (1.8)	5,037 (2.7)	8,632 (3.7)
	군인	314 (0.6)	52 (0.4)	789 (1.5)	147 (0.1)	22 (0.8)	1,010 (0.5)	1,324 (0.6)
취업경로별	학교추천	17,225 (37.8)	5,299 (40.3)	23.765 (44.5)	74,363 (63.4)	733 (27.4)	104,165 (55.8)	121,391 (52.3)
	채용시험	3,070 (6.7)	275 (2.1)	4,302 (8.0)	14,597 (12.4)	64 (2.4)	19,238 (10.3)	22,398 (9.6)
	친구 및 친지 소개	14,921 (32.7)	1,637 (12.4)	2,044 (3.8)	18,277 (15.6)	124 (4.6)	22,082 (11.8)	37,003 (15.9)
	실습	1,794 (3.9)	2,878 (21.9)	21,733 (40.7)	3,576 (3.0)	1,499 (55.7)	29,686 (15.9)	31,480 (13.6)
	부모경영사업	2,937 (6.4)	482 (3.7)	208 (0.4)	1,590 (1.4)	35 (1.3)	2,315 (1.2)	5,252 (2.3)
	자영	1,206 (2.6)	1,909 (14.5)	154 (0.3)	557 (0.5)	29 (1.1)	2,649 (1.4)	3,675 (1.6)
	기타	4,434 (9.9)	684 (5.2)	1,248 (2.3)	4,323 (3.7)	204 (7.6)	6,459 (3.5)	10,893 (4.7)
분야별	전공분야		6,558 (49.8)	49,731 (93.0)	99.775 (85.1)	2,508 (98.1)	158,572 (85.0)	
	다른분야		6,606 (50.2)	3,723 (7.0)	17.508 (14.9)	185 (6.9)	28,022 (15.0)	

〈자료〉 문교통계연보, 1989

위에서 무직자와 미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진학도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로 이해되며, 매년 이만큼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이 고등학교로부터 사회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비진학·미취업 상태로 매년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인력의 낭비라는 점에서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진학·미취업 상태는 청소년 개인들에게도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대학졸업자의 경우도 취업율이 사실상 50%정도에 머물고 있고, 심각한 실업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 문호를 개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고등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문제는 취업의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산업발전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당분간은 대졸 인력보다는 고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중에도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력수요가 전체의 약 43%가량은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같이 인력수요의 전망으로 본다면 고교졸업자의 취업전망은 밝은 편이며, 정책적으로도 산업발전을 위하여 이들을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쪽으로 유도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이해된다.

〈표-2〉 학력별 인력수요 전망('86~'96) (연평균 천명, %)

	'81~'85	'86~'91	'92~'96
중 졸 이 후	249 (47.3)	205 (36.3)	136 (24.5)
고 졸	180 (34.2)	220 (39.0)	239 (43.1)
대 졸	97 (18.5)	139 (24.7)	180 (32.4)
(4 년 제 대 학)	63 (12.0)	91 (16.2)	124 (22.3)
합 계	526 (100.0)	564 (100.0)	555 (100.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비진학 청소년 문제를 취업의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인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직업적 기능이 없는 경우, 취업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적인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절대

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서 취업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 물가불안, 수출부진, 원화절상 등 여러가지 원인들르 말미암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아직도 인구증가율은 높은 반면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제기획원 추정에 의하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도는 실업률이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은 실업상태에서 일부 일자리는 대학졸업자들의 하향적 취업으로 잠식되고 있고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표-3〉 실업률 전망

	단위	'88	'89(추정)	'90(추정)
경제활동인구증가	천명	432	616	556
고용증가	천명	516	567	393
실업률	%	2.5	2.7	3.5

〈자료〉 경제기획원, '90년 경제운용방향, 1989, p.54

학력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졸이하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고졸, 대졸 이상이 가장 높은 실업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4〉는 학력별 실업률 추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5〉는 학력별 실업자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실업자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4〉 교육정도별 실업자율 (단위 :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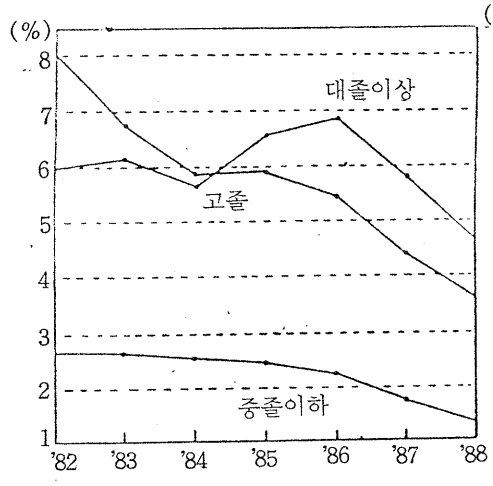
	총수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
'82	654	4.4	269	2.7	314	8.0	71	6.0
'83	613	4.1	255	2.7	281	6.7	77	6.1
'84	568	3.8	224	2.6	262	5.8	82	5.7
'85	622	4.0	222	2.5	291	5.9	109	6.6
'86	611	3.8	201	2.2	286	5.4	124	6.9
'87	519	3.1	157	1.7	251	4.3	111	5.7
'88	435	2.5	114	1.3	220	3.6	101	4.7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8,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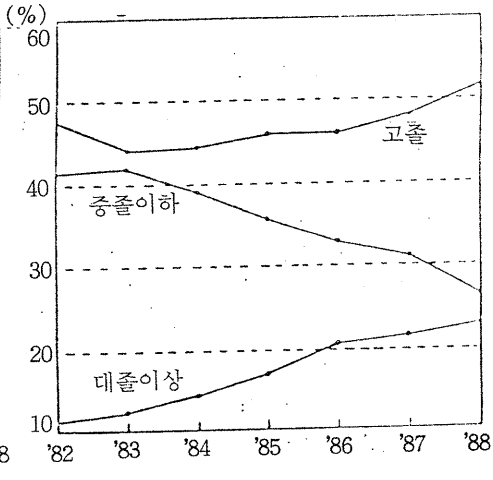
〈표-5〉 학력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82	100.0	41.1	48.0	10.0
'83	100.0	41.6	45.8	12.6
'84	100.0	39.4	46.1	14.4
'85	100.0	35.7	46.8	17.5
'86	100.0	32.9	46.8	20.3
'87	100.0	30.3	48.4	21.4
'88	100.0	26.2	50.6	23.2

(도 1) 교육정도별 실업률 추이



(도 1) 교육정도별 실업자 구성비 추이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8, p.14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따라서 실업자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은 경제상황을 전제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생각해 본다.

(1) 적정 경제성장 정책의 추진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되고 있으며, 고졸 인력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매년 노동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절대 취업기회를 증가시키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과거와 같은 10%이상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기획원은 6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중 고용안정을 위하여 7%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원은 6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중 1%의 경제 성장이 갖는 고용흡수력을 약 5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보다 경제 성장률을 2% 높혀도 겨우 10만명 정도가 더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1988년 실업자가 43만 5천명인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2% 증가하여도 33만 5천명은 여전히 실업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인구 증가율이 아직도 높은 상태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7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도 새로운 잉여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유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적정수준의 경제 성장 정책은 고용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된다.

(2) 청소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 추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경제정책의 하나는 창업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대기업은 이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증대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비판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고졸 정도의 인력에 대한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취업의 관점에서 중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표-6〉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표-7〉은 1988년 현재 중소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기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등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보면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표-6〉 중소기업의 발전 추이

		1980	1985	1986	1987
사업체수	전 체	32,560	45,933	52,011	56,318
(개)	중소기업	31,466(96.6)	44,803(97.5)	50,787(97.6)	54,988(97.6)
종업원수	전 체	2,099	2,529	2,833	3,096
(천명)	중소기업	1,036(49.4)	1,413(55.9)	1,626(57.4)	1,767(57.1)
생 산 액	전 체	36,817	78,076	93,132	115,204
(10억원)	중소기업	11,763(32.0)	27,777(35.6)	35,283(37.9)	43,707(37.0)
(10억원)	중소기업	4,292(35.1)	10,372(37.7)	13,185(39.1)	16,399(39.5)

〈자료〉 상공부, 상공백서, 1989, p. 496

〈표-7〉 중소기업의 규모별 현황(1988년)

구 분	사업체수(개)	종업원(천명)	출자액(10억)	부가가치(10억)
5~ 19인(A)	31,814	318	4,791	2,044
20~ 99인(B)	19,437	830	18,464	7,113
100~300인(C)	3,737	619	20,051	7,242
계 (D)	54,988	1,767	43,306	16,399
비 중				
(A / D)	57.9	18.0	11.0	12.5
(B / D)	35.3	47.0	42.6	43.4
(C / D)	6.8	35.0	46.3	44.2

〈자료〉 철강업 통계조사보고서, 1983, 경제기획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숫적인 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추어 사업체수가 우선 매우 부족한 편이고 출자액이나 부가가치 산출면에서도 매우 비중이 낮은 상태에 있다. 오히려 상태가 이와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수가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용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강회되어야 하겠다.

〈표-8〉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비교

구 분	단 위	일본(1986)	대만(1984)	한국(1987)
사 업 체 수	개	432,265 (99.1)	120,981 (98.8)	54,988 (97.6)
종 업 원 수	천명	7,869 (72.2)	3,280 (66.5)	1,767 (57.1)
출 자 액	%	(52.0)	(47.9)	(38.1)
부 가 가 치	%	(56.5)	(41.9)	(39.5)
비고(중소기업기준)		4~300인	1~300인	5~300인

〈자료〉 상공부 상공백서, 1988, p. 496

(3) 소규모 자영업의 선별적 육성 정책 시행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경제정책으로서는 자영업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고려될만 하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에 대한 경제정책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하였고 수출위주의 경제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이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자영업에 고용된 인력 비중은 아직도 높은 편이며, 앞으로는 이 방면에도 경제정책의 관심이 세심하게 기울여져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의 경우를 보면 총 취업자 1,687만명중 자영업주는 5백 9만 3천명이고 가족 종사자는 2백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표-9〉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전국) (단위 : 1,000명)

	총 수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피 고 용 자		
				계	상시고	일 고
1982	14,379	4,910	2,631	6,839	5,584	1,256
1983	14,505	4,897	2,438	7,171	6,009	1,162
1984	14,429	4,578	2,220	7,632	6,337	1,295
1985	14,970	4,679	2,187	8,104	6,714	1,390
1986	15,505	4,868	2,204	8,433	6,979	1,454
1987	16,354	4,994	2,169	9,191	7,662	1,529
1988	16,870	5,093	2,167	9,610	8,114	1,496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8, p. 122

여기서 자영업주는 자기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 종사자는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돕는 자를 뜻한다. 여기 2백 16만 7천명의 가족 종사자는 소규모의 개인적 자영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또한 5백 9만 3천명의 자영업주들로 대부분 소규모의 개인적 자영업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소규모의 개인적 자영업에 취업하는 인력비중이 전체의 약 1/3에 해당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에 대하여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심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고 인식된다. 특히, 사회적 요구가 높은 기술 써비스 직종, 예컨대 안경, 제빵, 제과, 자동차 정비, 목공예, 금속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귀금속가공, 나전칠기, 양복, 양장 등등의 분야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기술을 쉽게 배우고, 자영업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소망스럽게 판단된다. 자영업에 대한 세심한 조사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질높은 기술써비스가 요구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제도를 신설하고 비진학 청소년으로 하여금 기술자격을 얻고, 자영업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정책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이디어, 기능 및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영업을 통하여 쉽게 스스로 고용창출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장려하는 경제정책도 앞으로 매우 긴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영업을 통하여 절대 취업기회를 성장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특히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향의 경제정책연구가 비진학 청소년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청소년을 위한 직업 훈련 기회의 확충

매년 22만 가량의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이 배출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표-1〉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상황('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비진학자는 50%에 이르나 이중 취업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약 40%정도는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실업계 고교 졸업자는 거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실업계 고졸자의 취업률에 비하여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극히 낮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 예컨대 취업의사 결여, 취업정보 결여, 직업기능 결여, 취업조건 불만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중에서도 직업기능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해석된다.

다음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인배율은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충족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87년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인배율은 1.24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취업률은 74.3%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족률은 59.89%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10〉 구인 배율 및 취업률

	구 인 배 율			취 업 률			충 족 률		
	계	국·공	사설	계	국·공	사설	계	국·공	사설
1970	0.9	0.8	1.0	73.2	39.5	79.5	77.4	52.2	81.0
1975	0.9	0.9	0.9	78.2	48.3	86.7	82.9	53.2	90.0
1978	1.2	2.1	0.9	86.4	73.1	89.2	74.4	33.0	74.7
1979	1.2	2.0	1.0	84.3	68.1	88.7	68.5	34.8	85.4
1980	1.0	1.2	0.9	80.0	72.6	82.2	78.6	60.5	85.3
1981	0.99	1.0	0.94	81.0	66.0	84.0	82.1	67.5	89.3
1982	0.89	1.2	0.79	70.7	73.9	69.7	79.7	61.5	88.6
1983	1.20	1.5	1.0	84.0	78.9	87.2	70.2	54.2	84.9
1984	1.05	1.2	0.99	83.9	71.1	89.3	79.7	59.6	89.8
1985	0.97	0.92	0.99	85.4	68.0	91.4	88.1	73.5	92.8
1986	1.02	1.23	0.95	74.86	39.7	86.86	73.32	32.2	91.6
1987	1.24	2.02	1.07	74.30	75.6	87.84	59.89	37.5	81.79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8, p. 358

이와 같은 현상은 임금, 근로조건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 희망자의 직업기능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미루어 볼 때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기능을 갖게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학교교육을 개혁하여 직업교육의 기

회를 넓혀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여 고졸 비진학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형태는 공공직업훈련원, 사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훈련원수, 훈련직종수, 훈련인원수는 〈표-11〉과 같다.

〈표-11〉 연도별, 형태별, 훈련원수, 훈련직종수 및 훈련인원

	1984				1985			
	계	공 공	사업내	인 정	계	공 공	사업내	인 정
훈련원수	294	80	183	31	312	78	185	49
훈련직종(수)	186 (143)	64	82	40	177 (149)	57	85	35
훈련인원수	53,169	23,538	20,764	8,867	56,714	22,953	23,876	9,885

	1986				1987			
	계	공 공	사업내	인 정	계	공 공	사업내	인 정
훈련원수	309	78	165	66	287	79	130	78
훈련직종(수)	190 (168)	67	87	36	182 (155)	69	70	43
훈련인원수	52,779	23,294	19,042	10,443	61,393	22,931	28,199	10,263

특수훈련 : 공공 특별과정 양성인원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보, 1988, p. 361

그리고 훈련대상별 훈련인원은 〈표-12〉와 같다. 1987년의 경우를 보면 〈표-12〉과 같이 기능사, 기능장, 훈련교사, 감독자, 관리자, 고용근로자 등의 대상을 합하여 총 61,393명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의 현황을 좀더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본다.

〈표-12〉 연도별, 대상별 직업 훈련인원

	1983	1984	1985	1986	1987
총 계	52,871	53,169	56,714	52,779	61,393
기 능 사	52,142	51,846	55,385	50,858	46,059
기 능 장	247	304	243	278	274

	1983	1984	1985	1986	1987
훈 련 교 사	482	431	127	154	64
감독자·관리자		588	959	1,487	1,572
고 용 근 로 자					13,425

특수훈련 : 공공 특별과정 양성인원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8, p. 361

(1) 공공직업훈련원의 직업훈련 역량강화

'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직업훈련이 시작된 이래 공공직업훈련원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사업내직업훈련원 및 인정직업훈련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공공직업훈련원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다음 〈표-13〉은 공공직업훈련을 포함한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의 역할 분담을 나타내 준다.

〈표-13〉 직업훈련 형태별 역할 분담

형 태		훈 련 직 종
공공훈련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 각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으로서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양성이 어려운 직종 (금형, 기계공작, 용접 등) • 수출전략직종(보석가공, 염색, 제직 등) • 첨단 및 신수요직종(전산응용기계 등) • 기능장 양성
	정 부 기 관	• 수용자 및 재소자 자체능력 배양을 위한 직종 (조적, 미장 등)
	지방자치단체	• 영농직종(농업기계정비 등) • 농가수입증대 및 농촌필요직종 (편물, 봉제, 전기 등)
	K. N. O. P	• 주한미8군 한국인 종사자 전직시 필요 직종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사 업 내 훈 련 (300인이상 사업체)		• 자체수용직종의 다능공 및 준다능공 (선반, 전자, 건축목공 등)
인 정 훈 련		• 공공,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양성하기 곤란한 직종 (조리, 인쇄통신, 도배 등)

〈자료〉 직업훈련공단, 연수자료, 1989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직업훈련은 사업내 직업훈련이 담당키

어려운 직종, 수출전략직종, 첨단기술직종, 기능장 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수분야 직업훈련, 장애자 직업훈련, 여성직업훈련, 생활보장과 직업훈련 등에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직업훈련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현황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한국직업공단의 직업훈련 현황(1989년 현재)

과정별 / 구분	계	기능장 양성과정 (기능대학)	전문양성과정 (8개원)	고등양성과정 (3개원)	산학협동 양성과정 (5개원)	일반양성과정 (25개원)	야간양성과정 (5개원)
훈련수준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기능사1급
훈련기간		2년	2년	3년	1년	6월	1년
입학자격		기능사1급 +3년경력	고졸	중졸	중·고졸	제한없음	• 기능사2급+2년경력 • 고졸+3년경력 • 직훈수료+기능사2급+1년경력 • 공고졸+기능사2급+1년경력
양성인원	16,320	700	3,765	1,440	8,010	1,400	435
훈련직종		기계공학과 등 9개학과	기계가공등 17개 직종	기계가공등 8개 직종	주물조형등 29개 직종	선반등 6개 직종	기계가공 등 10개 직종

〈자료〉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소개자료, 1989

이상과 같은 현황을 놓고 본 공공직업훈련원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역량을 확대할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 한국관리공단 중심의 공공직업훈련원은 비교적 여유있는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시설을 약간 보완하고, 강사제도 활용을 적극화 한다면 주야간 과정은 지금 양성되고 있는 인원의 두배에 가까운 정도로 훈련역량을 확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정도 역량 확대가 가능한지는 각 훈련원의 구조적 여건을 사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이지만, 가능성은 여러가지 면에서 엿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업훈련의 역량 확대는 물론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직종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후 기능자격을 얻고 자영 사업이 적극화 될 수 있는 직종훈련,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 연합체들로부터 위탁주문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개발등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효과적일 수 있는 직업훈련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 사업내 직업훈련의 활성화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체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단독훈련, 공동훈련, 위탁훈련 형태로 이루어진다. '87년 현재 사업내 직업훈련 인원은 총 14,208명으로서 그중 단독훈련은 10,444명, 공동훈련은 2,807명 그리고 위탁훈련은 95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88년의 경우에는 사업내 직업훈련 인원이 증가하여 18,16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업내 직업훈련 인원은 정부 정책에 의하여 매년 증가되어 왔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기업의 투자로서 양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앞으로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직업훈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내 직업훈련이야말로 훈련역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잠재력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기업들이 그 동안 직업훈련 역량 확대를 게을리한 것은 공공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의하여 기능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고, 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술경쟁이 강화되면서부터 기업만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자, 기업판도가 직업훈련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정책은 구태의연하게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사업에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 사업내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던 사항들이 이제와서는 오히려 사업내 직업훈련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내 직업훈련의 역량을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많은 장려 시책을 강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직업훈련과정, 인원, 시간 등 모든 것이 기업자체의 요구에 맞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기능사 자격 검정도 기업 훈련원이 노동부의 승인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내 직업훈련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강화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체가 유자격 또는 비적격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과정을 개발하여 여러가지 방법, 예컨대 기업체 단독훈련, 공동훈련, 타교육기관에 위탁훈련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개선, 직업훈련 장려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내 직업훈련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따라서 고졸미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기회가 넓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

(3) 인정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개인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인정직업훈련인원은 '87년의 경우를 보면 총 9,250명이고, 이중 674명이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3,669명이 비영리 법인에 의하여 그리고 4,915명이 개인의 직업 훈련원에 의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 인정직업훈련은 취업이 잘 되고 인력수요가 많으며 비교적 단기적 훈련이 가능한 직종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직업훈련은 비교적 훈련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사설학원 설립자들이 직업훈련보다는 재수학원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어 왔다.

직업훈련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공공직업훈련원에 대한 한계성, 예컨대 정부투자의 제약성 등, 때문에 사업내 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 제도의 역량을 육성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인정직업훈련은 정부정책에 따라서는 그 역량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개발의 관심을 돌려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의한 직업훈련도 장려해 나가는 한편 개인들이 직업훈련원을 세우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설직업훈련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훈련시설을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완하는 방법—예컨대,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공공직업훈련 시설을 이용토록 허용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면 사설직업훈련원의 설립과 운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양성 실적에 비례하여 적정한 훈련 보조금을 사설 직업훈련원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공공직업훈련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상황 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정책이란 점에서 고려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재수보다는 직업훈련을 택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앞으로 인정직업훈련제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그 역량이 확대 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취업알선 및 홍보기능 강화

기능인력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소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직업 안정 기관의 현황을 보면 1987년 현재 국립기관은 42개소, 공공기관은 10개소, 사설기관은 32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국립기관과 공공기관만이 취업 알선 및 직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만으로는 절대 숫자도 부족한 편이지만, 정보의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홍보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미진학 청소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결여, 직업훈련을 받은 뒤의 진로 개척에 관한 정보결여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직업훈련, 직업전망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연중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 예컨대 학생, 비진학 청소년, 성인, 여성 등에게 알맞는 형태도 필요한 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보 수집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정보 수집망이 전국에 걸쳐 확립되고, 정보전달체계(delivery system) 또한 전국에 걸쳐 형성되어야 한다. 정보전달 체계는 전국의 리·동 단위까지, 그리고 각급 학교 및 직업훈련원까지 연결되어 취업정보지가 주기적으로 전달되거나,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개인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취업 및 직업훈련에 관한 홍보 활동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직업관을 바로잡고 직업교육의 중요성, 취업기회(산업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포함)의 실상, 직업교육후 자기발전을 위한 계속 교육의 기회 등에 관한 정보를 바르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알려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라. 취업 여건의 개선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도록 유도하려면 학력간 임금격차 축소, 자격과 능력 위주로 채용하는 고용 관행 정립, 기능인 우

대 풍토조성 등 고용조건이 이들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능력과 자격 위주의 채용 및 인사관리제도 확립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학력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능력을 시사해 주는 유일한 사회적 지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반적 능력을 뜻하는 지표였다고 생각된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이전, 말하자면 기술자격제도를 포함한 각종 자격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학력이 사람들의 능력을 시사해 주는 유일한 사회적 지표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채용하고 대우를 결정하는 고용관행을 확립해온 셈이다. 그러나 사회가 분화 발전되고 여러가지 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리고 형식적 또는 비형식 형태의 다양한 교육제도가 발달되면서 부터 학력사회의 모순과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젠 어디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았건,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사람은 몇번이고 제3, 제4의 기회를 가지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 학력주의 고용관행은 청소년 시점에 비슷한 형식적 학력만을 인정하며 사람들의 자기능력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고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 형식적 학벌만 채우려는 잘못된 병폐를 시정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학력과 간판위주의 사회로부터 능력과 자격 위주의 사회로 모든 관행과 제도 및 풍토를 바꿔 나가야 된다. 우선 능력과 자격 위주로 고용하고 인사관리를 해 나가는 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직종·전직급의 직무능력, 직무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참으로 방대한 연구작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먼저 시행 가능한 직종부터 우선순위를 세워서 직무분석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표준화된 직무규정을 각급 기관 및 기업이 적의 가감해서 활용토록 조치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직무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가 적합한 능력 소유여부를 판정하여 채용하고 대우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형식교육에 편중된 왜곡된 교육열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용후에도 현장직무교육도 현장직무교육(on th job train-

ing), 직무외 교육(off the job training), 자학자습(self-Development)등 어떤 형태에 의하여 공부했던간에 직무능력이 향상되면 그에 맞도록 대우하는 능력본위의 인사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고교졸업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고방식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사회도 고용자의 직무능력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됨으로 결국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능력과 자격 위주의 채용과 인사관리제도가 확립되어 나간다면 많은 비진학 청소년들이 장래의 꿈을 잃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희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기업별 학력보다는 능력위주로 채용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대학 출신자보다도 권위 있는 전문직업교육기관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능력위주의 채용과 인사관리 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표-15〉 전문직업교육기관 출신자 우대

구 분	구성비(%)
○ 권위있는 전문직업교육기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15.9
○ 둘 다 동등하게 고려하겠다.	59.1
○ 정규대학 과정을 거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20.2
○ 기 타	4.8
계	100.0

〈자료〉 교육정책자문회의, 3차 세미나 보고서, 1990, p. 31

(2) 학력간 임금격차 축소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하여 대학진학열이 과열되고 직업교육이 기피되는 현상을 빚어 왔다. 최근의 정부의 노력과 기업체의 노력에 의하여 임금격차는 크게 좁혀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1989년도 임금격차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 지수는 1987년도 70.9%에서 1989년 76.4%로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무직과 생산직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고, 따라서 사무직 선호경향이

강하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었다.

〈표-16〉 년도별 학력간 초임 격차(남자사원)

구 분		1987년	1988년	1989년
사무직	대 졸	306,320(100.0)	336,961(100.0)	388,240(100.0)
	고 졸	217,312(70.9)	251,274(74.6)	296,414(76.4)
생산직	대 졸	316,079(103.2)	349,248(103.6)	401,417(103.4)
	전문대졸	259,757(84.8)	349,248(103.6)	341,618(88.0)
	고 졸	219,897(71.8)	252,670(75.0)	303,175(78.1)
	중 졸	198,292(64.7)	230,625(68.4)	282,292(72.7)

주:( )내는 사무직 대졸남자사원 기준 임금격차지수임.

〈자료〉 상공회의소, 1989년도 표준자모델 임금 조사 보고, 1990, p. 14

〈표-17〉 년도별 사무·생산직간 초임 격차

구 분		1987년	1988년	1989년
대 졸 남자사원	사무직	306,320(100.0)	336,961(100.0)	388,240(100.0)
	생산직	316,079(103.2)	349,248(103.6)	401,417(103.3)
고 졸 남자사원	사무직	217,312(100.0)	251,274(100.0)	296,414(100.0)
	생산직	219,897(101.2)	252,670(100.6)	303,175(102.3)
고 졸 여자사원	사무직	163,040(100.0)	188,417(100.0)	228,964(100.0)
	생산직	167,567(102.8)	193,806(102.9)	237,413(103.7)
간부사원 과 장	사무직	508,117(100.0)	566,973(100.0)	651,838(100.0)
	생산직	514,655(101.3)	574,510(101.3)	663,295(101.8)
간부사원 부 장	사무직	703,220(100.0)	783,150(100.0)	880,897(100.0)
	생산직	715,494(101.7)	792,737(101.2)	892,501(101.3)

주:( )내는 사무직 임금기준 생산직의 임금격차지수임.

〈자료〉 상공회의소, 1989년도 표준자모델 임금 조사 보고서, 1990, p. 16

그러나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사무직과 생산직간의 임금격차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9년도에는 오히려 일부학력에 있어서는 생산직 임금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도 남녀간 직종간 임금격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임금조사는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력간 임금격차는 고졸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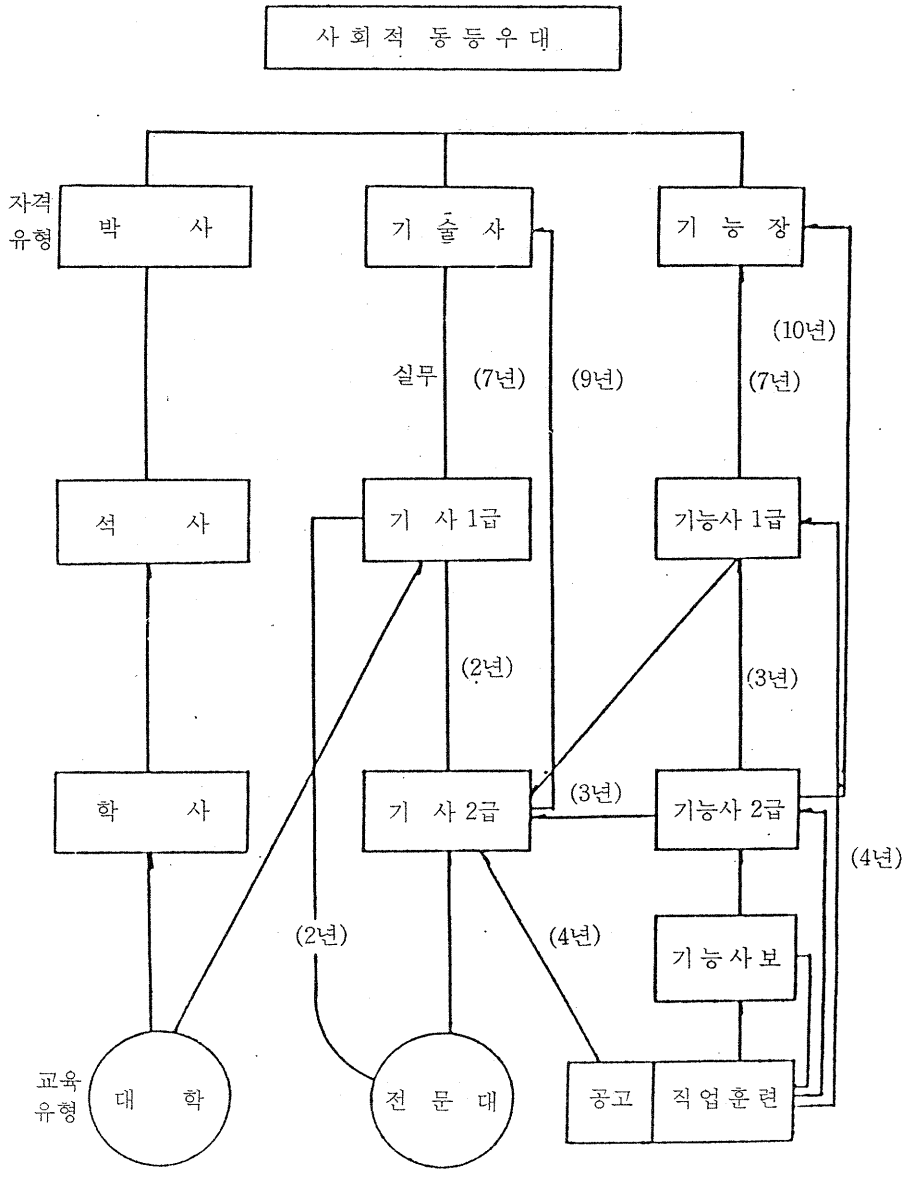
〈표-18〉 '87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단위 : 원, 지수)

구 분		1,000인이상	500~999인	300~499인	200~299인	100~199인	20~99인
사무직	대졸남자	434,230(100.0)	94.7	91.3	87.6	86.1	83.8
	고졸남자	334,336(100.0)	92.8	90.9	86.9	86.1	83.3
	고졸여자	262,050(100.0)	93.8	91.2	86.0	84.9	81.6
	과 장	780,177(100.0)	90.5	88.3	83.6	80.3	74.9
	부 장	1,051,573(100.0)	89.9	88.2	84.6	81.1	73.5
생산직	대졸남자	451,832(100.0)	94.8	89.2	86.3	83.0	84.9
	전문대졸	388,806(100.0)	92.9	87.9	96.3	83.0	83.4
	고졸남자	340,786(100.0)	97.7	92.4	87.3	85.0	84.4
	고졸여자	256,372(100.0)	99.8	93.7	92.4	89.4	88.1
	중졸남자	315,310(100.0)	97.2	92.4	88.1	85.3	86.6
	중졸여자	245,418(100.0)	99.4	91.4	91.6	89.3	89.9
	과 장	781,926(100.0)	92.2	89.9	85.3	81.7	75.7
	부 장	1,059,270(100.0)	92.9	89.8	84.2	80.5	73.5

주 : '초임'기준 대비임.

〈자료〉 상공회의소, 1989년도 표준자모델 임금 조사 보고서, 1990, p. 12

[도-3] 기능인 우대 제도



〈자료〉 장석민, 자녀의 길 부모의 지혜, 1986, p. 303

적정한 임금격차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기업의 자체적 노력을 촉구하여야 될 것이다. 임금수준 결정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와 정책개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3) 기능인 우대 풍토 조성

산업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높은 기능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래전부터 정부는 기능인 우대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 다음 [도-3]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도-3]에 의하면 기능사 2급을 학사자격과 같게, 기능사 1급은 석사와 같게 그리고 기능장은 박사급으로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과 능률을 존중하는 풍토로 바뀌게 되면 아마도 직업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풍토조성을 통하여 기능인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산업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인에 대한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구조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구체적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능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 및 기업차원에서 이들의 복지혜택을 넓혀 가는 정책의 추구이다. 안전작업을 위한 위해환경의 개선노력, 주택자금지원 또는 주택 대여, 재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제도 도입 등은 기능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넓혀가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각종 기능 자격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기능인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인에 대한 우대 풍토가 조성될 때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의욕도 높아지고 실제적인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정책의 개발·추진과 사회적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능인 존중과 우대 풍토가 조성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社會福祉로서의 敎育社會 建設의 方案

현대사회가 갖는 윤리적 함의는 복지사회임을 크게 내세운다. 또한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는 사람들이 갖는 열망(aspiration)의 충족을 표방하며, 그중에

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으뜸을 차지한다. 따라서 복지사회는 교육사회에로의 지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구나 1930년대 대공항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는 교육열망의 충족을 필수적인 방편으로 요구한다. 특히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남달리 높다는 것과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의 지름길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특수한 사정에 있는 일부 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적 혹은 자선적인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국가)적 책임하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변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대책으로서의 교육사회 건설은 나아가 전체 국민을 위하는 국가적 사업의 중핵에까지 이르게 된다.

제한된 여건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한계,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인간소외감의 증대 및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학력위주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이를 부채질하는 사회구조와 풍토, 학부모의 기대들은 경직된 학교교육에의 의존을 포기토록 강요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의 의존 포기의 대안으로서 학교교육의 개방과 사회화, 사회의 교실화 그리고 삶의 교육화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취업 및 사회대책의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사회에서 교육사회에로의 지향을 통해 평생교육체제의 이념 구현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1. 학교교육의 개방과 사회화

지나친 경직화와 획일화로 역기능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신축성 있게 개방(open)하여 학습사회에 이르는 길을 다원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교육의 대상과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방법에서 혁신을 요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별 대학확장(University Extention)프로그램, 또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능력위주의 과정운영

을 도모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학점제나 비학점제를 구분하기도 하며 교육방법과 교육시기도 근로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화한다. 그리고 수학자수는 대학별 수용능력과 교수능력에 따라 대학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입학정원에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한다.

둘째, 학교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 박물관 전산소 체육관 등 제반시설을 청소년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 활용토록한다.

셋째, 대학의 특성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특히 청소년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지역의 특성이나 청소년들의 필요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예를 들면 전산 교육 프로그램, 독서지도, 사회체육활동 등과 그외에 음악회, 연극발표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넷째, 대학(실업계 고등학교 포함)과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와의 제휴로 청소년을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과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업을 위한 적절한 준비교육(Switch Program)도 운영해야 하고 현직교육도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을 높인다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폭넓은 교양교육, 인간교육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사회의 교실화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토록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도와 감독이라는 소극적인 기능을 넘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기업체별 특성과 능력에 따라 기업체내에 사내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이들 교육과정을 위해서 학점제를 병행하여 일정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인정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은 학교에 위탁교육을 받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 등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평생교육법(가칭)을 제정한다.

사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교육법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

는바, 이를 대신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교육원(가칭)을 전국 시도단위로 개설 운영한다.

대상이나 내용면에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전문가 및 그 요원을 양성하는 기능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정년 퇴임한 고급인력을 활용하므로써 본인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부여할뿐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유익하다. 외국에서는 정년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Switch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넷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와 교육을 위하여 기업체나 자원단체의 재정지원을 얻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내 기업체들의 재정지원이 있어야겠지만, 특히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산업체에서는 그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와 교육비로 환원토록 한다.

다섯째, 군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의무화한다.

군 입대자중 특히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일정기간 의무화하여 사회에서 그 능력을 활용케 한다. 이러한 군의 직업교육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원병 제도와 아울러 각종 대중매체(특히 TV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평소에 늘 시행토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군의 사회적 봉사기능과 함께 군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관련 자원 단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향상이나 재충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다.

특히 한국청소년연구원과 같은 특별 전담기구의 기능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계속적인 기초연구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 삶의 교육화

생애 전반에 걸쳐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배움이라는 인식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대책과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움 그 자체가 새로운 자기발견이고, 또한 즐거움이라는 경험과 재확인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 관련 단체나 대중매체 또는 산업체별 책읽기 운동이나 독서 클럽 운영을 통한 배움의 기회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식의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도서를 접할 기회의 제공과 함께 독서토론회, 독서감상문 쓰기 등 책읽기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별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 제휴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청소년 단체를 구성 운영한다.

대체로 현존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어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나아가서 취업청소년들이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나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나 공간은 다양하고 집약된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상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삶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하여야 한다.

박물관, 공공도서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과 같이 그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에의 출입을 무료로 개방하여 탐구심과 배움의 희열을 경험하도록 한다. 특히 학생에게 베푸는 각종 할인제도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또는 근로청소년에게도 대폭 확대 적용하는 전반적인 청소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들은 열악한 조건하에 일하고 있을뿐 아니라, 많은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산업체별, 지역별 전문 상담요원의 채용과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다섯째, 유익업소의 권장(세제혜택 및 융자제도)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활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적극 제한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기준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을 위한 지도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들은 미치는 영향력이나 문제발생의 원인이 사회전반의 활동이나 제도와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대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혁신과 사회의 교실화와 삶의 교육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과 새로운 접근의 적극적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청소년 대책과 운동은 곧 사회복지의 일환이고, 이러한 사회복지의 충실화는 복지국가에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靑少年 文化空間의 確保 綜合對策方案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공간은 청소년의 4가지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놀이를 즐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즐기며, 한껏 배움으로써 그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체육공간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공간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문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동단위, 마을단위, 아파트단위로 청소년체육 절대공간을 확보한다.

둘째, 놀이할 공간이 확보되면, 공간의 사정에 따라 농구대, 탁구대 등등의 시설을 1점 이상 상설 고정시킨다.

세째, 각종 국·공립 체육관 시설을 청소년에게 공개한다.

네째, 학교 체육시설을 청소년에게 공개한다.

(2) 문화공간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문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구단위, 읍단위별로 「청소년 시네마」를 설치 운영하여 비데오나 영화를 상영한다.

둘째, 구단위, 읍단위별로 "청소년 놀이광장"을 설치·운영한다.

셋째, 구단위, 읍단위별로 청소년회관을 설치·운영한다.

1. 음주, 마약, 성문제 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한다.

2. 패거리 싸움의 예방, 청소년 대상 상담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아우트리치"프로그램을 강화한다.

1) 자원봉사자 활용

2) 민간 시간제 청원경찰 활용

3) 대학생 시간제 고용

4) 사회교육전문요원 실습생 활용

3. 각종 클럽활동을 학교와 공동으로 활성화한다.

(3) 사회교육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 공간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부문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백화점의 일정공간이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시설이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셋째, 박물관 및 사적지 등은 청소년에게 가능한한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각 대학별로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예비대학을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청소년 사회교육방송을 강화한다.

(4) 행·재정지원 대책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화 시킨다.

1.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국 공통프로그램과 각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표준화 시킨다.

2. 인력활용을 위한 국가재정 보조계획을 체계화한다.

1) 민간 시간제 경찰 충원

2) 대학생 시간제 충원

3. 사립사회교육기관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4. 청소년 문화공간 담당자들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시킨다.

3. 學父母 意識改革 對策

1) 學父母의 責任과 役割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문제는 거의 무작정이라 할만큼 대학진학을 위하여 인문계 고교에로 집중진학하여, 제한된 대학생정원 때문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들은 인문고를 마침으로 대부분이 취업준비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한 직업을 끝내 얻지 못하여 사회주변지대로 유입된다.

여기에서 학부모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현실적 진로지도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도록 부추기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경우이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교육적 제도와 풍토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학부모들의 의식에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1) 개인주의적 교육열의 불식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높은 교육열이 공동체적 교육열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교육열로 표출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교육비의 신설 또는 인상, 등록금과 육성회비의 인상, 교과서대의 인상등에는 강하게 저항하면서도, 각 개인별로 학원보내기, 참고서 사주기, 과외지도등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의 풍토가 되어 있다. 그 결과, 학교는 가

난하여 교육여건이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개인별로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입시산업을 살찌우고 있는 것이다.

각 가정에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가정에도 10만원대의 자녀교육도서나 피아노가 있지만, 학교의 도서실은 보잘 것이 없다. 참고서나 아동용 교양도서는 자질과 인쇄수준이 높지만 학교교과서는 형편이 없다. 학교교과용도서는 1권당 평균 6--700원 즉 담배 1갑 값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파행적 운영이 빚어내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양산, 공동체적 교육발전에는 무관심하면서 개인자녀의 학교성적에만 몰두하는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에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하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의 전개가 시급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돕기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전한 학부모운동도 육성하여야 한다.

(2) 학부모의 진로지도능력 함양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하여 관심은 있으나, 오늘날의 다양한 직업세계와 그에 상응하는 교육계열과 전공종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진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손쉽게 하는 요구가 "대학에 가자"는 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마치 아무런 진로가 없는 것처럼 대다수 학부모들이 믿고 있다. 우리사회가 학력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들이 학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는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이다. 대학에 가지 못하면 마치 인생 전부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믿고 있으며, 이러한 맹신을 부단히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애쓴다. 자녀들을 이 맹신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게 되면, 일단 한단계는 성공한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세계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에 즉시 진학하지 않아도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을 통하여 학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체내의 교육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학력인정을 받는 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개선되어, 부분적으로는 생산직의 임금이 사무직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길만이 성공의 보장인 것처럼 믿는 맹신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학부모들의 진로지도능력을 높히기 위하여는 각종 매스미디어와 사회교육

및 각종 사회조직을 통한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과 교육의 관계에 관하여도 정확한 지식을 학부모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3) 출세주의 교육관의 탈피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냄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력이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교육의 목적을 지위획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학교교육을 사회적 지위획득으로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은 식민지시대부터 특히 강화되었으며, 해방이후에도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취업조건, 학력간 임금차별, 결혼상대 선택 등에 있어서 학력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았으며, 감각적으로는 더욱 높아진 듯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각 개인의 지적·인격적 성숙을 돕는데 있는 것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도 지적·인격적 성숙은 필수적이다. 만약 교육이 개인과 공동체의 지적·인격적 성숙에 실패하고 지위획득을 위한 인간의 경쟁의 장으로 계속될 때,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입게 된다. 지적 독선, 인격적 퇴행, 도덕적 타락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면, 그러한 사회에서의 지위획득은 의미를 잃는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위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교육운동이 시급하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교육 본질회복을 위한 교육운동이 일어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자녀의 개성과 선택의 존중

우리의 자녀들은 소질과 능력도 다르고 개성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자신에 의한 선택을 무시하고 부모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한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대화의 단절은 대화시간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일방적 지시와 요구가 대화를 가로 막고 있다. 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일방적 지시와 요구도 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여야 한다는 부

모들의 요구에 회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학력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부모들보다 오히려 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녀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서 대학입시준비가 아닌, 다양한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학부모들은 이들이 진지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문제집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마치 '문제집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의 비진학·미취업이 장기간 계속되면 그것은 사회문제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범주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청소년'은 결코 아니다. 이들을 문제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이 이들을 진짜 문제집단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그들이 문제는 아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도 또는 취업의 기회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인 것이다.

대다수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취업 또는 진학의 길로 들어선다. 그 사이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문제이다. 그 공백기간에 부모나 일반국민들이 이들을 문제집단이나 우범자처럼 취급하면, 정말로 문제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문제집단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에게 미안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을 밝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학부모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의식개혁을 위하여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매스미디어의 협조를 얻어 올바르고 건전한 교육관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반상회 등 지역사회의 각종 행정조직을 통하여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주민토론회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상회시에 맞추어 TV를 통하여 교육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실시하므로써 반상회 교육토론회와 방송을 연결시킬 수 있다.

셋째, 각 학교별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한다. 과거의 사친회는 이미 없어졌고, 현재의 육성회는 육성회비를 걷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협력하는 진정한 학부모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학교별 학부모회를 발전시켜 지역별 학부모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조직의 건전한 육성은 학교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바로잡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양상을 줄이는 데에 공헌할 것이다.

2) 言論媒體 活用方案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의 수립에 있어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은 청소년의 생활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및 사회교육 등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이나 인식정도는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관한 의식개혁을 위해 언론매체을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때 어떤 내용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대책수립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매체선택의 측면에서, 인쇄매체의 장점은 설명이 가능하고, 이미지의 고정화에 유리하며, 주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특성에 있다. 이에 비해 TV는 그 직접성, 영향성, 즉시성 등의 특성으로 신속하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의 부각이나 여론화를 위한 목적에 보다 유리한 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개혁이란 구체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민에게 노출되어 있는 TV매체의 활용전략이 보다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하겠으며, 활용의 수준도 수용자 차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소극적 차원에서부터 유료로 방송시간이나 인쇄지면을 사서 활용하는 적극적 차원까지의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언론매체 선택을 위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언론매체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의 올바른 접근을 위한 언론인 대상 계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언론매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상 송신자 차원의 대책이라 하겠는데, 계도 및 교육의 수준이나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교양프로그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교육 및 계도의 방법도 직접적 교육 방식과 자료제시, 교육현장참여, 관련자와의 좌담회 마련 등과 같은 간접적 교육방법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 대상의 언론매체 수용교육과 이를 통한 교육문제의 주체적 시각정립을 유도해야 한다. 언론매체가 지니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자칫 청소년 문제의 본질보다는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인식에 그칠 수 있는 수용자의 나약성을 극복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의 주체세력으로 학부모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수용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매체의 내용속에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주제들이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공포하는 청소년 교육관련 기사 및 프로그램 감시(모니터)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매체활용 방안일 수 있겠는데 가벼이 스쳐 지나가는 언론매체의 메시지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청소년 문제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청소년 문제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매체 모니터활용의 활성화를 학부모들 스스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하겠다.

넷째, 텔레비젼의 좌담 프로그램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의 좌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러한 주제의 기획을 언론매체가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협력을 시도해야 하며, 아울러 방송시간이나 지면이 허용되었을때 이를 잘 이용하여 청소년 문제의 실체를 학부모 대중에 체계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부모 대중의 정서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연사와 필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언론매체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언론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논조가 변하고 매우 가변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언론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들에 의한 검토와 대안마련의 자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대안 마련을 현명하게 시도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례나 모형을 드라마화하거나 다큐멘타리로 제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드라마를 통한 의식개혁은 간접적 메시지 전달이란 특성 때문에 좌담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 전달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청소년 문제의 확산과 그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모든 언론매체를 망라한 캠페인이 가능한한 장기적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대안마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중 캠페인 형식의 청소년 문제 확산은 유용하다고 하겠다.

여덟째, 기존의 언론감시 운동단체(예, 각종 TV모니터회 등)와 협력하여 청소년 교육 또는 문제에 관한 감시활동이 보다 강조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언론매체 활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홉째,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현황이나 조사자료를 보도자료화하여 제반 언론매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언론대책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언론매체의 감시결과 지적되는 사항중에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들은 관련 언론사나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피이드백 채널을 항시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意識과 制度改革의 相互作用

(1) 意識改革의 重要性

「의식」은 행위 유발의 근본동기가 되고, 그 행위내용을 결정하는 직접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행위를 중지시키려면 「의식」을 잠재워야하고, 행위내용을 고치려면, 의식형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있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문제를 유발하고 문제의 성질을 규정하는데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학부모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손 쉬운 대처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학부모의 의식과 청소년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는 앞에서 말한 의식과 행위와 같이 단면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인과계열이 아니고, 相因相成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自性의 것이기 보다 자기 외적여건, 즉 국가제도나 사회풍조에 의해 대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의식형성에 자극이나 여건이 되어진 제도와 풍조를 원인으로 간주, 그것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반대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기 좋게 「의식구조 또는 정신상태 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정곡을 찌른 것 같지만, 기실 이것처럼 막연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방안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들의 그러한 의식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왜곡되었다거나 심지어 죄악시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생존의 문제로서 생존권의 정당한 주장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자기나름의 대응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지성이나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자기의 기득권위와 선범위치를 기화로 학부모들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회정의니, 국가이익이니, 전체적 요구니하는 명분아래, 원론적으로 비판을 일삼는데, 이것은 학부모의 의식개혁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학부모인들 할일 없고 기승부리기 좋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혹사 과열경쟁에 몰아넣겠는가? 그들도 부모로서 할짓이 아닌줄 알고 하루빨리 그 교육지옥에서 헤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내 인생낙오자 교육실패자로 전락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진퇴유곡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의 의식을 개혁하려면, 먼저 그렇게 의식화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와 여건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 意識形成의 要因

그러면 학부모의 의식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외적여건들은 무엇인가? 이

는 시간적으로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엷은 의식층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사회변천에 따라 압축되어 앙금지고 굳어져버린 병폐의식이며, 공간적으로는 복잡다양해진 여러 기능과 사회각층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뒤엉켜서 형성된 징후군(徵候群)의 하나여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출하기도 어렵거니와, 오랜 세월 누적된 관념이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하루 아침에 씻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학부모가 된 연령층은 삼십대 중반에서 오십대 초반으로, 이들은 해방후의 혼란, 6·25의 격동을 거치기는 했으나, 당시 사회주역이었던 지금의 60, 70대의 보호아래 성장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뼈저린 고통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비록 도덕적으로는 불건전했으나, 날로 성장 발전하는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며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살아 왔다.

이렇게 구김없이 자라온 이들은 전통과 단절되고, 60, 70대의 인생관 처세술과 자못 다르다. 60, 70대의 연령층은 그들이 살아온 불운한 환경에 찌들리어 자기를 억제하고 운명에 복종하며, 인고와 궁핍을 미덕으로 알았다. 분수를 지키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재산증식에 힘썼다. 이들은 「다시는 나의 자식들에게 우리 세대와 같은 가난과 고통을 넘겨줄 수는 없다」, 「우리세대는 이왕 불행했으나 너희들은 꼭 행복해 달라」는 것이 간절한 염원이었고, 삶의 큰 보람이었다. 6·25로 폐허가 되었던 이땅위에, 오늘과 같은 경제건설의 터전을 다져 놓은 것은 60, 70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희생정신이었다.

학교교육과 사회경험을 주로 군사혁명 이후 전개된 근대화 과정속에서 해온 40, 50대 연령층은 헌법을 위시해서 모든 제도와 법령이 조석 변하는 격변에 적응하는데 길들어졌고,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왜곡된 사회상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타고 넘는 처세의 요령을 배웠으며, 투기와 특혜, 출세와 권력, 경쟁과 실패라는 두 틈바귀에서 곡예를 하듯 돈을 움켜쥐는 상술을 익혔다. 물질만능, 출세주의를 신봉했고, 협애한 가치관, 획일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일삼는 투사가 되었으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파렴치의 생리를 배웠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해낸 사람은 성공하여 가진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고 못 가진자가 되었다. 가진자는 사람대접을 받고 사회발전의 열매를 향유했지만, 못가진자는 멸시를 받고 사회발전에 밀려

서 그늘진 곳에서 문명의 (찌꺼기를)뒤치다꺼리나 해야 했다.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처세술과 요령에 능숙하고 성패의 결과에 대해 민감한 현대인들(4, 50대)은 어떻게 해야 이세상에 살아남고, 출세하고, 남을 지배하며, 향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안다. 그것은 오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것 뿐이다.

인생을 그렇게 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 온 그들은 자녀들을 어떤 경쟁에서도 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부모들의 이러한 경쟁의식, 출세욕구가 집중되어 부딪치는 곳이 학교요 진학과정이며, 거기서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곳이 사회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패배자가 늘어나고 실패자가 많아지니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결국 과열경쟁속에서 승자도 패자도 모두 인간실패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참상이다.

(3) 意識과 制度改革의 竝行

이렇게 보면,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확실히 부모들의 과열경쟁의식이 빚어낸 결과임에 틀림없고, 그「의식」은 이 시대 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불법과 무책임과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이 무시되어 어떻게하든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열악한 생존환경에 의해 대응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문제들의 개혁을 먼저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정부는 법적제재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육의 악조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의식을 선도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조처가 오히려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학부모의 의식을 더욱 굳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자주 바뀌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그것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순리 기능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원인치료가 아닌 현상치료, 때로 극단적이고 충격요법을 쓰기 좋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갔던 것이다. 마치 근자에 세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가 오히려 세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제도 마련에 있어서, 먼저 악법 또는 문제제도가 되어버린 제도 자체를 개폐,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 교육환경의 개

선, 부모의식의 선도를 위해 제도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학부모의 의식을 개혁하는데는 제도보다 효력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의 개선이 먼저 가시화 되어야만 학부모의 의식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교육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의 벽이 두텁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사회개혁,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개혁된 만큼 학부모의 의식도 따라서 개혁될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불신 풍조를 불식하는 일인데, 그러자면 부모들의 의식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당국부터 자기개혁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식개혁을 먼저 해야 하느냐?, 사회개혁을 먼저 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논증에 빠져,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논쟁이다. 실질적으로 의식과 제도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원인과 결과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다스려 가지고는 근본적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양면이 동시 병행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되, 그 주도는 행정당국이 잡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야할 때다. 그러할 때 학부모의 의식은 스스로 개혁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1.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를 중심과제로 삼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육 및 사회정책적 전환을 유도하고, 국민의식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1)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집단의 생성 행로 및 규모를 추정하고 (2) 이들 집단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3) 문제의 근본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며 (4) 이에 따른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방향설정과 실천가능한 몇가지 중점적 대책방안을 교육대책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 대책 측면에서 주요정책들을 제시하는 일 등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된 연구의 방법은 관련문헌 및 각종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설문서와 의견서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대책영역별로 조정책임자를 두어 집필내용을 협의 조정하는 등 일반 정책연구의 방식을 따랐다. 이 연구는 1990년 1월말부터 2월말 사이에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각급학교 졸업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진학 실패자 및 비진학생의 진로경로를 중심으로 추산해본 결과, 1989년도에 고졸(중졸제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양적 규모는 당해 졸업자중 약22만명과 진학 재시도실패자 21만명을 합하여 약43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중졸 비진학자 및 중·고 중

퇴자를 고려하면 50여만명 이상으로 추정) 이들 집단은 대체로 학교에서의 실패와 상급학교 진학의 좌절을 경험하고 부정적 자아의식과 사회관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낮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들 집단은 학생 등 다른 집단에 비하여 청소년 범죄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졸이후 방황하는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심각한 정신의학적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체 청소년환자중 수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재수생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입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발생원인들로는, 교육내적 영역에서 취업이후 사실상 진학이 불가능한 교육제도의 측면과, 진학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진로지도의 취약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취업 및 사회구조적 영역에서는 취업기회의 부족과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 취업정보 미비 및 홍보활동 부족 그리고 학교이외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국민의식 구조적 영역에서는 학력을 명예로 생각하고 능력이나 업적의 등가물로 생각하는 의식 구조상의 요인,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 및 과외수업 풍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및 언론대책 미흡 등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 검토되었다.

앞으로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사회변동의 추세와 대상집단의 전망을 전제로, (1)고등교육기회의 과감한 확대와 개방 (2)중등교육 정상화를 통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3)취업기회 및 훈련기회 확대 (4)교육사회 건설을 통한 청소년 문화형성과 진작 (5)학부모의식 변화를 위한 언론매체 활용 등을 통한 교육관 정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면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하여 교육대책, 취업 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 의식대책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이 마련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영역별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책으로서 (1)입시제도 및 대학교육개혁을 통한 고등교육기회의 과감한 개방과 확대 (2)중등교육 과정의 개혁을 통한 정상화 방안 등이 구체적 방안과 더불어 제기되었다. 둘째, 취업 및 사

회대책으로는 (1)취업 및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 육성, 공공직업훈련 역량 확대 및 인정 직업훈련 강화, 취업알선 및 홍보기능 강화, 취업여건의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고, (2)사회복지로서의 교육사회 건설을 위하여 학교교육혁신, 사회의 교실화, 삶의 교육화 방안이 지적되었으며, (3)청소년문화의 형성과 진작을 위하여, 체육공간의 확보, 놀이공간의 확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세째, 학부모의식 개혁대책으로는, (1) 학부모의 교육관 및 사회관 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돕기 운동 등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및 진로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학부모교실운영 등이 제시되었고 (2)언론매체 활용을 위한 매체종사자들에 대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식 고취 및 자료제공(예, 학부모 건전지도 드라마, 다큐멘타리 제작 공급) 및 청소년대상 시간대 확보와 장기기획 프로그램 개방 등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3)의식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教育對策

1) 고등교육 문호개방과 확대방안

(1) 입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혁한다.
  가) 학교소재지(지방) 주민자녀에 가산점
  나) 사회봉사경력, 군필경력, 직업경력에 대한 가산점
  다) 10년이상 직업경력자 대입 특혜부여
  라) 전문대 졸업후 직장경력 3년이상인자 4년제 대입 무제한 허용
  마) 방송통신대학은 모든 고졸자에 개방, 지원자 전원수용

(2) 대학 및 학과 신·증설은 대표적으로 허용하고, 학생정원조정을 대학자율에 맡김.

(3) 모든 고등교육기관(개방대·전문대·4년제대학)에 야간제, 계절제, 정시제 교육과정운영을 허용함.

(4) 모든 대학에 청강생 제도를 운영케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심사후 정규학생으로 편입케 함.

(5) 모든 대학의 재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6) 학사편입의 무제한 허용
(7) 산업체부설 교육기관의 학력을 인정함.

2) 중등교육과정의 정상화 방안

(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을 대입선발고사 준비가 되지 않도록
  가) 성적우수자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평균수준의 학생에 맞는 수업 운영을 해야 함.
  나) 학생 각자가 자기적성에 맞는 과목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
(2) 일반계 고교생들에 대한 취업준비를 교육과정상에 대폭 반영해야 함.
  가) 2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학관 수강을 허용함.
  나) 기업체, 관공서에서의 현장실습 경험기회 확대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 대학입시에서 선발시험 폐지, 고교 3년 간의 생활 및 성적기록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함.
  나) 영·수·국 등의 도구과목에 대한 획일적 강조 지양
(4)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 동일분야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도록 운영되고, 여러 취업직종에 대한 고른 관심과 적성이 발현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가)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점을 대폭시정되어야 함.
  나) 실업계 고교내에서의 전공변경이 학교간, 동일학교내에서 가능해야 함.
(5) 실업계와 일반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함.
  가) 실업, 일반계간의 상호 전학, 편입학 허용, 이수과목 상호인정 등
  나) 실업, 일반계간의 학교시험 상호 교체이용 허용
(6) 현행 학력고사에서의 이과, 문과 과목별 배점 비중차이 최소화 시킴.
  가) 수학과 국어 배점 균등화
  나) 국·영·수 배점 비중을 약화시키고, 학생별로 과목별 배점을 선택할 수 있게 함.

(7) 고등학교에서의 교과목 수를 축소 조정함.
가) 교련과 체육 통합
나) 지리(한국, 세계)통합
다) 국어(국어, 문학, 작문, 문법, 한문)의 축소통합
(8) 암기 위주의 교육과정운영 지양,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 도모토록 교육과정을 운영함.
가) 100권 이상의 필수 도서목록 제시
나) 각종 사회봉사활동 경험, 시상경력을 대학전형에 반영
다) 학교내에서의 봉사경험 높이 평가(내신성적 반영)
(9) 학교행사의 내실화로 학교의 삶이 즐겁고 의미 있도록 유도
가) 학생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 교류증진
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등학교 문화의 고급화 유도(음악, 무용, 연극의 관람 등)
다) 학생과 지역사회의 교류기회 증대

나. 就業 및 社會對策

1) 就業機會 및 訓練機會 擴大 對策

(1) 취업기회 확대 방안
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정 경제성장정책 추진(6-8% 성장율 유지)
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
①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② 고용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확대
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자영업의 선별적육성정책 시행
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 지원 정책 강구
②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기술 써비스 업종의 육성지원
(2) 직업훈련 기회확충 방안
가) 공공직업훈련원의 훈련역량 확대
① 주야간 훈련인원의 증원방안 강구
② 자영업종을 포함하여 취업율이 높은 직종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나) 사업내 직업훈련의 활성화

① 사업내 직업훈련 역량확대조치 강구

② 사업내 직업훈련 역량확대를 위하여 규제조치 완화

다) 인정직업훈련의 역할 강화

① 인정직업훈련의 역량확대방안 강구

② 인정직업훈련의 육성지원정책 강구

(3) 취업알선 및 홍보기능 강화 방안

가) 취업 및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전국 Network형성

나) 취업 및 직업정보 전달을 위한 전국적 정보전달 체계 확립

① 리·동 단위 및 각급학교, 직업훈련원까지

② 컴퓨터 Nerwork전달시스템 강구

다) 고졸자를 위한 리쿠루트지 확대를 통한 올바른 직업관계도 및 홍보활동강화

(4) 취업여건의 개선

가) 능력과 자격위주의 채용 및 인사관리제도 시행 촉구

나) 학력간 과도한 임금격차 축소(학력간, 직종간, 남녀간, 직급간)

다) 기능인 우대 풍토조성 정책 시행

2) 社會福祉로서의 敎育社會 建設의 方案

(1) 학교교육의 혁신과 사회화

가) 대학확장 프로그램 또는 계속 교육학부의 설치를 통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진학 허용

나)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 박물관 전산소 체육과 및 각종 실습실의 개방 활용

다) 대학과 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취업훈련 및 현직교육(O.J.T)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사회의 교실화

가) 기업체의 사내대학 및 대학원과정의 설립운영을 통한 취업자의 학위 취득 요구 해결

① 학점제운영

② 위탁교육의 부분적 활용을 통한 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

③ 재정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부여

나) 평생교육법(가칭)의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진흥

다) 대학 및 각종 연구소의 정년퇴직한 고급인력을 활용한 시·도단위의 사회교육원(가칭)을 통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전문 요원 양성

라) 청소년 대상 산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청소년 복지와 교육 강화

마) 군복무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의무화

① 지원병제도

②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군의 사회봉사의 기능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바) 전문성 향상과 재충전을 위한 청소년 관련자원단체나 국가기관 종사자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사) 한국청소년연구원과 같은 전담기구의 기능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기초연구와 청소년대책 강구

(3) 삶의 교육화

가) 학습기회와 건전한 사회인식을 위한 청소년 관련기관, 대중매체 및 산업체별 책읽기운동 전개

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소속감을 위한 청소년 단체의 설립·운영

다) 박물관, 사적지, 국립공원등의 무료 개방과 각종 할인제도의 확대

라) 청소년 유익업소의 권장(세제혜택 및 융자)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활동 제한과 청소년출입 규제 강화

3) 청소년 문화의 형성과 진작

(1) 체육공간의 확보

가) 지역별(동, 마을, 아파트 단위)청소년 체육 절대공간 확보의 의무화

나) 각종 국·공립체육시설의 공개

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농구장, 탁구대, 수영장)의 설치·운영

(2) 놀이공간의 확충

가) 지역별(구, 읍단위)청소년 시네마의 설치·운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강화

나) 지역별 "청소년 놀이광장"의 설치·운영을 통한 놀이문화의 형성
다) 지역별 청소년 회관의 설립 운영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① 학교와 공동으로 각종 클럽활동 활성화
② 청소년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아우트리치"프로그램 운영
라)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시설 활용
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백화점 및 공공기관의 공간활용 법제화
바) 청소년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의 체계화

다. 學父母 意識改革 對策

1) 학부모의 교육관 및 사회관 정립

(1) 지역사회중심의 "학교돕기운동"을 통한 개인주의적 교육열의 불식
(2) 학부모의 진로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학부모교실 운영
(3) 출세주의 교육관의 탈피를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4) 각종 민간지원 단체활동을 통한 자녀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
(5) 언론매체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문제집단시 관점으로부터 관심 집단에로의 인식유도

2) 언론매체활용

(1) 언론매체 종사자들에 대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에 관한 문제의식고취와 방송제작 및 기사 자료제공
(2) 학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게재 및 방송의 확대
(3)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건전 지도를 위한 드라마, 다큐멘타리의 제작 공급
(4)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관련된 방송과 신문 모니터링의 실시와 피드백
(5) 설립될 교육전담방송국의 청소년 대상 시간대확보와 장기적 기획프로그램 개발

3) 건전한 사회풍토의 진작

(1) 학력위주의 고용, 임금등 인사제도의 혁신
(2) 사무직우선 직업관의 불식
(3) 물질주의적 직업관의 타파
(4) 고학력선호의 과시적 혼인풍조의 지양
(5) 학교본위 교육제도의 개혁과 사회교육의 확충

2. 결론 및 제언

1989년 현재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수가 43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나 취업대책은 미흡하고 취약하다. 최근 과열입시로 인한 70%이상의 대입지원 청소년이 탈락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고교졸업생이 50여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지게 되었고 입시철을 맞아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나 제도권내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논의는 피상적이나마 활발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나 정책적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소외와 좌절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자칫 사회구조적인 상황속에서 반감과 적개심을 유발해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 집단은 복지의식의 향상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권리 및 생존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점차 다양하게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가의 노력등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다. 한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을 교육, 훈련시켜 취업시키는 일은 사회적 통합성의 구축과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과 중요대책의 방향과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 수행결과가 유관부처에 보고되고 사회에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수용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 실천되지 못한다면 이 보고서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기왕의 정

책 연구들이나 보고서가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들을 고려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하는 문제는 관심부족의 문제다. 그동안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미흡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것 같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정책결정자들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적, 사회적, 국민의식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주무행정부서의 책임체계상의 문제다. 그동안 이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담부서가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통합적으로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를 특정부처(예, 체육청소년부)내에 설치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셋째는 정책실행상 그 실현 가능성과 실행에 있어서의 시간적 단계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기왕에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원칙적인 것들이 많고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없지 않다. 또 대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성질의 것들이다. 따라서 정책실행 전담부서에서는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단기·장기의 시간적성격에 맞는 단계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은 정책추진력에 관한 것이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강력한 의지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현실적 재정지원은 청소년 복지기금의 활용이 강구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대책연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자료확보와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요구되는 연구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강대근, "현대산업사회와 청소년 실업문제", 청년연구 제9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7.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9.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_____, 주요경제지표, 1989.

_____, 한국통계월보, 1989. 12.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1985.

김신일, "학력경쟁의 지양과 진로지도", 초·중등교육 질개선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3.

김영모, 청소년 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부, 1988.

노동부, 노동백서, 1988.

_____, 노동백서, 1989.

_____,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84.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8.

_____, 문교통계연보, 1989.

_____, 밝은 미래를 향한 우리교육, 1989.

서정화 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의 방향탐색, 홍익대 교육연구소, 1986.

이상주,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의식구조,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7.

이재창 외, 청소년문제 종합진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1.

이종재, 비진학자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1978.

_____,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시설－재수생 문제상황, 대책, 접근방법에 대한 재음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80.

이종재, 강상조, 공은배, 비진학자의 사회·경제·심리적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1978.

정원식 외,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청소년 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1988.

_____, 청소년 백서, 1989.

최충옥,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소고", 학생생활 연구 제2집, 1982. 12

_____,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방송", 방송심의, 1982. 5

체육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1988.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987.
_____,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987.
_____, 한국교육문제의 종합진단, 1984.
_____, 한국의 교육지표, 1989.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소년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1985.
한국청소년연구원,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1989.
Griffins, Brenda S. & Charles T., Juvenile Delinquency in Perspective, N. J. : Harper & Row, 1978.